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 일시 : 2010년 4월 1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 기획의도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고가 일어난 후 지금까지 실종자 수색의 성과는커녕 사고 원인조차 오리무중입니다. 정부는 사고 대응에 있어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 위기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락가락 말바꾸기와 정보통제로 온갖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됩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정보통제 속에 언론들의 보도 행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천안함 참사 보도에 '올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다수의 보도가 추측과 예단 '아니면 말고'식의 내용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은 연일 선부터 '북한 공격설'을 부각하며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안함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특히 정보통제 문제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따져보고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진단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제목 : 천안함 참사 관련 정부의 정보통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일시 : 2010년 4월 13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사회 : 전규찬(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 발제 1 : 천안함 사건과 군 기밀주의의 사회적 비용 /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2 : 주요 신문의 천안함 참사 보도 진단 / 김수정(한겨레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원)
- 발제 3 : 방송의 천안함 참사 보도 진단 / 도형래(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토론자(가나다순)

김서중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성길 (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과장)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 정책위원)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발제문.

천안함 사건과 군 기밀주의의 사회적 비용

.....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1. 들어가며

지난 3월 26일 밤 서해안 백령도 서남방향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1200톤급 초계정 천안함이 두동강이 난 채 침몰했고 근무하던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지역은 수차례에 걸친 남북 해군간 교전으로 인해 민감해질 대로 민감해진 NLL 근방이었고, 사건 직전 한미연합군이 행하고 있던 독수리 연습 등으로 긴장이 크게 고조된 상태였다. 사건 속보가 전해지자마자 온갖 불길한 상상을 자극했다. 그러다보니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 단정하는 오보가 전파를 타기도 했다.

천안함 침몰 후 2주가 지나고 있지만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군 당국은 4월 1일 비교적 종합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문답형식으로 의혹해소를 시도했고 다시 4월 7일, 생존자들의 기자회견과 민군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불신하는 여론을 되돌리는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 거짓말 행진과 정보의 취사선택

무엇이 문제인가? 군이 스스로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자임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마치 조사받는 피의자처럼 즉 최대한 감추는 것이 목적인 사람처럼 처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나 진술을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군은 군사기밀이라는 이름으로 1차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가공된 문답자료만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입증책임을 군이 아닌 언론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방어적인 단답식 대응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나마도 번복하기 일쑤다.

TOD 동영상과 지진파/음파

예를 들어 침몰장면을 찍은 열상수신 동영상, 이른바 TOD 영상의 공개과정은 군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처음에는 공개하기 힘든 군사기밀이라고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편집된 일부만을 공개하며 이게 전부라고 했다가, 그 이전 동영상이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나머지를 공개했고, 그 뒤에도 자동촬영 동영상이 있다는 예비역들의 제보가 이어지자, 편집된 새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그 외에는 진짜 없다고 우기는 식이다. 그러나 많은 제보자들은 다른 동영상

이 또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지질자연연구원이 사고당일 측정한 지진파와 음파와 관련된 정보이다. 지질연구원 측은 이 정보를 이미 사고 다음날 국방부에게 알렸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는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된 후 사실을 확인하는 식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사건 발생 시각을 둘러싼 논란

사건 발생 시각과 관련한 혼란도 이 사건이 왜 국방부와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낳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국방부는 4차례에 걸쳐 사건발생 시각에 대한 발표를 수정한 끝에 4월 1일, “당일 발생한 지진파와 열상장비로 촬영된 동영상 등을 종합할 때 천안함이 21시 22분경 사고로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잠정결론을 밝혔다. 그런데 사고 1주일 후 한 방송사가 입수하여 보도한 해군의 상황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발생 시각이 밤 21시 15분으로 되어 있고 1분 뒤인 16분에는 백령도 방공 진지에서 폭음이 청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7분이 의문의 시간으로 남아 논란거리가 되었다. 그 후 생존자들의 증언 등에 의해 의문이 다소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9시 16분 경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소음을 둘러싼 논란, 장병 핸드폰 회수의 이유를 둘러싼 의혹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일지 없는 사건

사건 발생 시간을 둘러싼 군의 발표가 이 모양이니 정리된 사건일지 따위가 있을 리 없다. 의혹은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 침몰된 천안함이 통상적이지 않은 항로를 선택한 경위, 특히 백령도 인근 1마일 이내로 접근한 이유, 당일 있었던 함포사격의 목적과 경위, 구조 지연이 발생한 원인과 타당한 이유, 사고 당일 천안함의 독수리훈련 등 한미 연합작전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하고 있다. 원인을 두고도 좌초 혹은 피로파괴 가능성, 북 잠수정의 침투에 의한 어뢰공격 의혹, 한미 연합군 측의 분실 기뢰에 의한 사고 의혹 혹은 오폭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군 당국의 제한된 설명은 의혹만 가중시키고 있다.

3. 상식의 예외지대

군은 사고 발생 이래 지금까지 생존 병사들과 외부와의 접촉마저도 철저히 차단해오다가 여론의 반발이 일어나자 생존 장병들을 기자회견장에 내세웠다. 군은 당초 생존자들의 외상 후 장애 우려가 있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면서도 독립적인 주체가 치료적 방법을 통해 진술을 청취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상식 밖의 생존자 기자회견 그것으로 충분인가?

그러나 군은 환자복을 입은 생존병사들을 일렬로 세워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노출시켰다. 하지만 언론 경험이 전혀 없

는 생존자들을 일렬로 세우고 기자 질문에 답변하게 하는 것은 함구령 보다 더한 진실은폐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 당 신이라면 거기서 군 수뇌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해 생존자들이 기자회견장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이 핸드폰을 회수하고 그 통화기록의 일부만 공개하는 것도 의혹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고 있다. 생존자나 실종자 전원의 통화기록과 마지막 시간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 등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생존장병들의 진술도 내부고발자에 준하는 방식으로 군 이외의 독립적인 조사주체에 의해 녹취되어 진상규명 활동에 일조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함미 인양, 불투명한 함미 공개여부

심지어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대통령의 지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인양한 선체 절단면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고 다시 부분공개를 검토한다는 식의 구태를 연출하고 있다.

어제 군은 함미를 사실상 인양하여 백령도 연안으로 이동하였다. 군은 아직 함미를 어느 수준에서 공개할 것인지, 함미 내부의 증거보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군이 생존자 격리 수용과정이나 다른 1차 정보에 대해 은폐 시도와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국방부와 조사단은 함미 인양의 구체적인 단계를 이행하기 전에 함미 절단면 공개 방식을 결정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며, 시신들의 상태와 내부 잔해들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독립적인 주체들에 의해 기록하도록 할 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한 후에 인양을 시도해야 한다.

합동조사단, 과연 단장만 민간으로 바꾸면 되나?

군은 4월 들어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이라는 것을 꾸려서 의혹 없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조사단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 없다. 명단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부분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초기 구성은 육군 중장이 단장이 되고 대다수가 군이며 민간인 24명도 군 소속 연구기관과 2개 조선회사의 선박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들 선박회사도 사실상 군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보니 사실상 모두가 군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 조사단의 명칭을 민군합동조사단이라고 명명한 발상 자체가 군의 관료주의적 접근 자세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뒤늦게 조사단장을 민간전문가로 임명하고 외국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한 것은 만사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독립적인 외국전문가의 참여수준이 어디까지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군이 기밀을 이유로 정보접근을 제한하면 분석은 유보적이 되기 십상이다. 게다가 외국인들에게는 공개되는 정보들이 국민들이나 생존자 가족에게는 공개될 수 없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와 국방부가 진심으로 독립적인 조사주체를 꾸리고자 한다면 우선 합동조사단 명단을 공개하고, 이 중 군 당국이

불가피하게 참여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을 여야정당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군통수권은 작동하고 있나?

천안함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 중요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군이 묘한 이중주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한 점 의혹 없이 모두 다 공개하라는 지시를 4번이나 했다. 북한 도발론 등과 같은 증거불충분한 예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시도 병행하였다. 심지어 “절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발표하라”, “사실과 증거가 말하게 해야 한다”, “민군합동조사단장은 신망있는 민간인이 해야 한다”며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사실관계의 자투리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거나 이른바 ‘미사지’한 해명자료만 내용을 뿐 1차 자료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군이 내세우는 전가의 보도인 ‘보안’ 논리 앞에서 문민통제의 헌법정신도, 대통령의 군통수권도 속절없이 무력화되고 있는 셈이다.

4. 정보공개에 대한 군의 생략적 거부감

해군은 실시간으로 모든 해군 함정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들과의 교신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 교신기록의 부분공개만으로도 많은 의혹을 잠재우고, 군의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기다릴 여유와 신뢰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터이다. 그 밖에 분실기뢰의 회수율, 해군 정비기록 등이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의혹을 푸는 길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군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16개 항목 모두 비공개

이에 참여연대는 사건 발생 직후 천안함의 교신일지와 항적기록, 해군 함정의 사고예방, 정비, 위기대응 매뉴얼과 그 이행여부에 대한 기록 등을 포함한 일체의 1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군의 입장을 고려하여 군사기밀을 제외한 부분공개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였었다. 사실 군사기밀보호법은 절대적인 법이 아니다. 그 군사기밀보호법조차 제7조에서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 제2함대사령부측은 “공개 시 군 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현재 국방부 주관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이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1, 2, 5호에 의거)를 내세워 정보 일체의 비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백령도 인근에 과거 설치된 아군측 기뢰에 대해서는 공개가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채로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는 1차 자료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군 내부 보고서, 매뉴얼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뉴얼이 조사 중인 사안일 리 없고 그 공개 혹은 부분공개가 국가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사안인 지 의문이다. 한미 연합군이 70년대 배치했다가 수거하지 못한 기뢰나 폭뢰의 수와 종류는 해당 해역을 지나는 어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개해야 할 정보이지 국가안전보장 따위로 농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미 아군측 실종기뢰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 제보자의 진술이 보도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해군측에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국방부나 합참이 아군측 기뢰 설치 및 분실여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옳다. 군이 가장 민감해하는 교신/항적기록 역시 부분공개 혹은 일부 기밀사항과 암호를 제외하고 풀이 쓰는 방식으로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군의 의지이지 '안보우려'가 아니다.

<표1> 천안함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실종자가족) 정보공개 요구	국방부의 입장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 교신/항적 일지 등 기록과 보고서 등 6건 - 각종 해군 매뉴얼 및 보고서 등 3건 - 아군측 기뢰 유실 및 화수 관련 정보 4건 - 천안함 당일 임무관련 정보 3건	4월 9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 명의의 "비공개" 통보: - "공개 시 군 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현재 국방부 주관으로 민군합동조사단이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1, 2, 5호에 의거)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천안함 절단면 공개	"제한적 공개 검토 중" - 초기 국방부는 "언론의 억측과 의혹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혹시 희생자가 보일 수 있어 함수는 앞부분 함미는 뒷부분만 공개한다며 절단면은 촬영불가" 라는 입장을 밝힘. - 여론의 반발이 일자 '사실무근'이라며 반복. - 4월 12일 현재, "제한적 공개를 검토 중"
열상수신동영상 TOD 영상 공개	자동녹화 동영상 제한 공개 - 국방부는 당초 군사기밀이라고 공개를 거부하다가 21시 33분에 녹화가 시작되었다며 TOD 동영상의 일부만 공개하고 그 이전 녹화본은 없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4월 1일 입장을 반복 해병부대에서 21시 26분 27초부터 촬영한 40분 분량의 천안함 침몰 영상을 공개하면서 "TOD 운용병이 미상의 폭발음을 듣고 상급부대에 보고한 뒤 해당 임무구역을 탐색, 침몰함을 확인한 후 오후 21시26분27초부터 녹화했다"고 밝힘. - 4월 7일 생존자 기자회견을 겸한 합동조사단 보고서에서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장면 (21시22분38초)을 담은 자동녹화 TOD의 일부를 공개
생존자 증언 공개	기자회견 방식의 공개 - 사건 초기 생존자들이 "자신들만 살아 돌아 온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들어한다며 언론과의 접촉을 철저히 막음 - 여론의 반발이 일자, 중환자 1인을 제외한 생존자 전원을 한자씩 차림으로 기자회견에 배석토록하여 언론과 약식 문답

표지, 목차까지도 '국가기밀'

군의 이런 태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필자가 직접 했던 정보공개청구 사례만도 여러건 '보안'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예를 들어 F-X 사업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서 군은 역시 보안을 이유로 결과요지는 물론, 목차, 표지까지 2급기밀로 분류했다. 다목적 헬기 개발 사업 감사처분 요구서 정보공개도 같은 이유로 담당자 사인까지 2급기밀로 분류했다. 이라크, 아프간 관련 여러 차례의 정보공개에서도 군은 자신들이 가공한 정보 이외의 1차 자료를 공개하는데 생략적인 거부감을 표시했었다.

<표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국방/외교 정보공개 청구 사례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사례	국방부의 입장
2002년 방위력개선행업에 대한 감사결과 - 2002년 8월 27일 청구 - FX 사업계약 타당성 관련	목차까지도 비공개 - "F-X 관련 사항이 국가기밀로 지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 '처분요구서 목차, '감사실시개요, '감사결과 처분요구 권고 및 통보사항', '각 감사 항목별 비밀분류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 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전체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감사처분 요구서 - 2004년 9월 23일 청구 - KMH 사업 추진 타당성 관련	목차까지도 비공개 - "KMH 관련 사항이 국가기밀로 지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 '처분요구서 목차, '감사실시개요, '감사결과 처분요구 권고 및 통보사항', '각 감사 항목별 비밀분류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 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전체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이라크 정세, 파병부대 활동 관련 4개 분야 40건 - 2006년 5월 - 이라크 정세, 자이툰다이란 부대 임무 수행 관련 보고서 및 예결산 등	부분공개(1차 자료, 예결산 자료 비공개) - 이라크 정세 및 철군정책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정보가 없다." -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 사업 관련 정보는 가공된 요약보고서의 공개로 대체 - 다이란 부대(공군 58항공 수송단) 관련 청구 정보는 아무 이유 없이 비공개 - 자이툰 부대 임무변경 관련 사항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 참여연대는 2006년 6월 2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국방부, 외교부는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일부 더 공개하였으나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다시 '비공개, '자료 없다' 처분
정부 파병 정책 및 파병 부대 활동 관련 - 2007년 6월	부분공개(1차 자료, 예결산 자료 비공개) - 국방부, "정보공개법 제 9조(정보공개 시 국가이익에 해가 될 수

- 정부 철군계획, 자이툰과 다이만 부대, 다산동의 부대 등의 임무내용, 관련 여결산 및 재건지원 내역, 이라크 정세 등 관련	있으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 해당"한다며 대부분 '비공개' 혹은 '자료 없다' 통보
레바논 시찰 보고서 - 2007년 2월 - 레바논 파병 타당성 관련	비공개 - 외교통상부는 정부의 '레바논 시찰보고서'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 관련 - 2008년 6월 - 감사결과, 기지이전 비용 추가증액 항목의 세부내역, 미 측의 기지이전 비용 분담 내역 등	비공개 - 국방부, 정보공개 시 국가이익에 해가 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2호 및 5호)를 내세워 비공개

5. 안보 뒤에 숨는 군, 안보를 파는 언론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은 정보는 취사선택하여 여론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라고 짐짓 신중한 채 하면서도 부정확하고 논란을 유발할만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발표하고 있다. 최초에는 기뢰나 폭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가 차라리 어뢰 가능성이 높다고 반복하는가 하면, 북한이 도발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북의 잠수정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식이다. 그리고 나서 군은 군사기밀이라 더 공개할 수 없다거나 시뭇 근엄하게 '의혹 부풀리기를 자제하라고 경고하는 위치로 돌아가면 그 뿐이다.

군사안보만 강조하는 군의 독선과 그 사회적 비용

정부와 군 수뇌부들은 몇몇 1차 자료의 공개를 안보의 위기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정부나 군이 군사적 갈등을 유발할 안보의 위기를 만들어 낸 사례는 따로 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2008년 합참의장 인준 청문회에서 북이 핵무기를 사용할 조짐이 있을 경우 선제타격한다는 방침에 대해 언급하는가 하면 국방부장관 인준 청문회에서도 "우발계획(개념계획)5029이 이명박 정부 들어 훨씬 진전되었으며, 북한에 쿠데타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종종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자극적인 발언으로 이명박 정부 집권 초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 2008년 국정원장은 김정일 건강 이상설을 공개하여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와 6자회담을 교착시키고 나아가 북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었다.

'아니면 말고'식 안보 상업주의와 그 사회적 비용

군의 기밀주의는 안보상업주의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국방부가 흘린 정보의 파편들은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하거나 적어도 이를 정치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이들에게 좋은 근거자료가 된다. 북한이 남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대라는 점, 북한이 남한 내 행위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론하거나 반론을 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쥐꼬리만한 의혹도 마치 대단한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헤드라인에 '마사지'를 가하는 사례를 몇몇 보수언론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이 명예훼손소송을 걸지 않을 터이니, '아니면 말고'식의 자극적인 보도가 남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보의 취사선택, 그리고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의 유도질문, 이를 활용한 추측성 보도의 순환고리가 가져올 '안보비용'은 간단치 않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전부 국민이 물어야 한다.

6. 나오며

군은 독점된 정보를 악용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폐쇄에서 비롯된 알량한 '전문성'을 내세워, 위협 해석의 권한을 배타적으로 독점한 후, '안보'라는 전가의 보도를 내세워 반론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관료주의적 순환논법에 안주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점된 정보가 기득권을 위해 남용될 때,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약당할 때야말로 진정한 안보위협이 발생한다. 부시 미 대통령 시절 정보당국이 조작해서 유포한 이라크 핵개발 관련 정보가 미국을 7년간의 무장 갈등에 휘말리게 했다.

'보안'의 사전적 정의는 안전하게 보호함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누구의 안전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군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실종병사나 국민의 안전이라기보다는 군 지휘부 자신의 안전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천안함 사건을 다루는 군의 태도는 군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킴으로써 도리어 안보의 위협과 불필요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 군은 안보를 걱정하기보다 '신뢰적자'상태인 군 자신의 위기를 걱정해야 한다. 군이 직면한 위기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 위협해석의 독점을 바탕으로 전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제의 예외지대에 안주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가능케 하는 군대 이외의 많은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적 훈련을 게을리 한 관료주의와 비밀주의의 위기이다. 더구나 자신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에 군이 겪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이 있다.

별첨1. 천안함 사건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서

별첨2. 천안함 사건 관련 국방부 정보비공개결정문

보론: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민주화 방향¹⁾

한국 사회에서 외교안보국방 분야는 반민주적 정치 전통이 낳은 최후의 성역중의 하나이다. 오랫동안 안보국가 이념에 따라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독재통치를 경험한 한국 사회로서, 민주주의를 심화시켜나가는 이행과정에서 '안보' 분야를 민주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성역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안보 분야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외교안보국방 분야를 민주주의에 개방시키고 안보 섹터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시민사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와 논의의 폐쇄성, 결정과정의 비민주성, 그리고 자폐적인 전문가 세계로 구성된 안보분야를 개혁한다는 것은 '시민단체와의 협의'나 '여론 수렴'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 시작은 국가와 전통적인 안보 담당자들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이 전통적인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 '주권'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표현은 civilian control 이다. 문민통제는 군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를 넘어서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한다. 즉 외교, 안보, 국방 분야의 시민 주권은 국가 주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안보 분야에서도 시민 주권에는 알권리,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안보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리, 잘못된 관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민주사회의 기본권이 모두 포함된다.

안보의 민주화는 우선 전통적인 안보기구/주체들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이 국가적 사회적 위협에 대한 재해석을 공동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이는 시민주권 실현의 한 과정으로서 기존의 폐쇄적 안보섹터의 배타적인 위협 해석의 독점에 도전하는 것이다. 위협을 해석하는 일을 민주화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는 것이 안보 민주화의 출발점이다. 그렇지 않으며 부시와 블레어 정부가 위협에 대한 정보조작으로 세계를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존 '안보 전문성'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안보는 안보전문가들의 안보만 지켜줄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협소한 지적 방식으로 훈련된 폐쇄적 집단 안에서 순환되는 정보와 논리는 본성상 매우 취약하다. 군사적 위협을 중심으로 안보문제를 보는 전문성은 도리어 안보불안과 군사적 경쟁에 의한 안보딜레마를 가져온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대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요구와 감성은 매우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 어느 누구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정당한 발언권과 판단의 권리를 갖고 있다. 오래 전부터 시대에 퇴행적이었다. 이제 안보 전문가는 단지 외교안보 테크노크라트만이 아니라 개발, 복지, 인권/민주주의,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행위자와 전문가들로 새로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 소장, '안보섹터-시민사회 관계의 민주적 개혁방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한반도평화보고서2005]에서 발췌

세 번째로 외교/안보/국방 영역의 윤리성을 회복해야 한다. 안보정책의 기본 취지는 다수에게 안전을 가져다주는데 있었지만 이제 안보분야 주체들은 그 윤리적 동기를 망각한 채 없는 위협을 창조하여 자체적인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도 없는 이라크 침략과 파병이 그러하며, 사회 빈곤층을 배반하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불필요한 무기도입이 그러하며, 치밀한 검토를 허용하지 않는 군방안보 기관들의 규모와 예산이 그러하며, 반증이 불가능한 온갖 위협론이 그러하다. 이렇듯 현재 국방안보 기관의 존재 비용이 바로 빈곤층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안전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인식도 이러한 윤리적 판단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네 번째로 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견제와 감시가 최고의 처방이라는 점을 국가가 인식해야 한다. 국방 안보 기관과 시민사회의 적절한 단체들이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의 투명성, 정보공개, 책임성에 관한 협약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 예를 들어 군사, 안보 정책의 수립과정, 군수생산, 군수무역, 무기도입 과정이 투명해지고 정보공개가 확대됨으로써 시민사회의 개입에 따라 담당자들의 엄중한 책임이 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안보 국방 기관들은 이를 통해 사회적 반응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

주요 신문의 천안함 참사 보도 진단

..... 김수정(한겨레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기 앞서

천안함 침몰 사고가 있고 난 후 2주가 흘렀다. 사건이 발생한 3월 26일 금요일 저녁 당시 해군 초계함 침몰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새벽에 이뤄진 긴급 구조와 이어진 실종자 수색작업, 그리고 침몰 원인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모든 사태는 혼란스럽고 매우 긴급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지난 4월 9일(금)이 되어서야 침몰되었던 함체의 인양작업이 본격화되고, 합동조사단을 통한 진상규명 작업의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면서 그제야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국민들과 언론보도 모두 침착함을 찾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천안함 참사 보도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같이 고려해야 할 복잡한 사안이다. 해군의 자국 연안 경계 및 순찰 임무를 주 목적으로 하던 초계함이 원인모를 이유로 침몰했다는 것은 안보적인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46명의 실종자와 1명의 수색 해군의 순직, 그리고 천안함 수색을 돕던 9명이 탄 어선의 침몰로 이어진 사건 사고도 잇달아 발생했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재난이자 대형 참사였고, 국가 안보적 사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건이다.

여러 사건과 정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천안함 침몰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는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성이 높다. 이번 천안함 참사에 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태도의 문제를 어떠한 기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인가?

이번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다. 먼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무엇인가이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국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돕고, 추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억울한 장병들의 죽음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은 치유될 수 없을뿐더러 의혹의 확대 재생산으로 불필요한 사회적인 불안감 조성까지도 의도하지 않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위험도 안고 있다. 둘째로 생존자의 추가 구명이 이뤄질 수 있으나 역시 중대한 관심사이다. 실종자와 사망자 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면서 인명을 최대한 구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당연한 처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3월 26일(금)부터 4월 9일(금)에 이르는 2주간의 주요 신문의 보도는 이같은 두 가지 주요한 관심사에 대해 정확한 사실의 확인과 후속 대응책 마련을 강구하기 보다는 확인이 안 된 추측과 주장의 확대, 몰아가기

식의 보도로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했다는 비판을 면치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군당국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취재보다 훨씬 어려운 반면 뉴스 수요는 폭증했다. 사건 발생시각의 반복과 군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의혹 등은 오히려 선정적이고 눈길을 끄는 뉴스 아이템들이 무분별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온상을 만들어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은 정보의 추가 수집을 위해 신변을 속이면서까지 추가 취재에 임하지 않으면 안됐고, 또한 실종자 가족들과 혹은 군당국과 소소한 마찰이 일어나는 일은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책본부와 취재진 사이에는 크고 작은 충돌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지만 언론의 사명만을 내세우다가 충돌이 발생하게 된 점도 분명히 있다. 또한 사고의 원인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조차 신속하게 전달하려는 언론으로 무분별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잘못된 정보가 그 자체로 '팩트'가 되어 신문에 실리거나 방송에 내보내지기도 했다.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뉴스는 정확하고 진실된 보도가 되어야 한다. 뉴스는 현상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작업의 일부분인 만큼 어떠한 정보가 믿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다시 정리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얻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신문의 참사 보도에 거는 기대와 신뢰

1)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진실 추구를 위한 사실 확인

이번 천안함 침몰 사건은 애초 금요일 저녁 9시 45분경에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은 토요일자 신문의 지면 제작이 마무리되거나 마무리될 즈음의 시각이다. 이 시각에 발생한 어떠한 대형 참사 사건도 신문보다는 방송이 빠를 수밖에 없다. 다만 방송이 보도의 신속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신문은 인터넷 신문과 모바일 속보 등을 통해 사건의 발생과 전개를 침착하게 보도하는 것이 일차적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사건 발생 다음날 신문은 방송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사건이 내용과 피해 규모, 그리고 대책본부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틸의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는 사실을 진실되게 보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이제는 사실에 관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ovach & Rosenstiel, 2007)

저널리즘의 진실 추구 과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사건의 전말 파악이 어렵고, 사태의 추이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저널리즘은 진실을 추구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혹은 이해를 향한 계속되는 확인과 질문을 쏟아내면서 접근해 가야 한다.

처음의 기사는 새로운 사건이나 추세에 대한 신호를 제시한다. 이 과정은 아주 간단하게 사건의 시간과 장소, 피해상황, 구조현황 등 사건의 물리적 외부인자들을 기록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들을 전달한다. 두 번째 기사는 세 번째 기사로 연결되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데 기사가 진화하면서 바뀌는 국면들과 맥락들을 추가한다. 보다 복잡적이고 중요한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이 따르고 의견 면에 관련 기고가 실리기도 한다. 시간을 경과해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혼란스러웠던 처음의 모든 정보 가운데 그릇된 정보들을 제거하거나 벗겨내고, 의도적으로 유포된 정보와 자기 선전적인 편견 등을 제거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에 공동체가 반응하도록 돕고, 진실 찾기를 위한 가닥을 잡아주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저널리즘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다. 사실을 실제 일어난 대로 확정하기 전에 해석의 단계로 뛰어드는 것은 잘못된 공동체의 반응을 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위험 보도: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환경재난(hazards)인지, 자연적인 재해인지,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disasters)인지, 위험(danger)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다만 추후에 동일한 사건의 재발이 가능한 잠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된 이슈임은 분명하다. 즉 미디어의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과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위험에 대한 실제 세계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적절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반응 역시 부적절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들이 정보를 통제하려는 군당국의 정보원에 크게 의존해 있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는 위험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불필요하게 공중을 공포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실제적인 위험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힘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Willis, 1997).

사건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저널리스트는 사실인 것 같은 다수의 사건을 찾아서 그 모두가 검증을 통해 사실 거짓 또는 루머로 밝혀지기 전까지 모두를 동등하게 보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룬다. 검증이라는 단계는 첫 번째 정보원이 제공한 것을 확인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다른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믿을만한 정보원을 취하는 형태로 전환되어 첫 번째 정보원의 의견을 뒷받침 한다면 검증된 것으로 간주해 버리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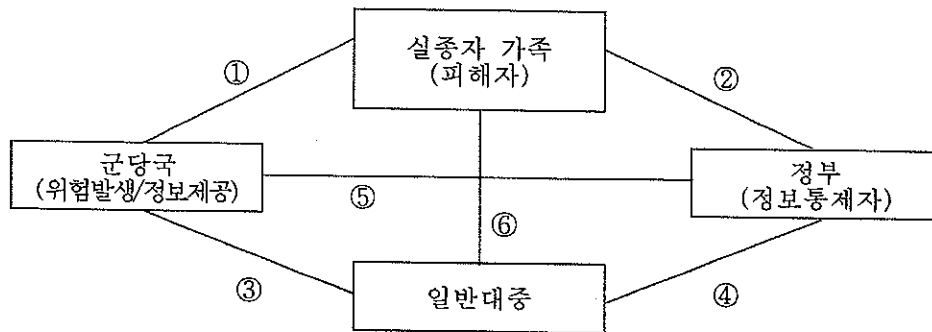
이같은 저널리스트들의 진실 탐색 과정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자주 정보원의 진술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문이 제시된 진술을 게재했다면 그 진술 자체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진실을 보도하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대중의 욕망은 정확한 것보다 빠른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이 때문에 더 오랜 조사와 확인 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보원의 등장이나 실종자 가족들의 개인사를 묘사하는 선정적인 보도가 앞서는 것은 언론의 위험보도에서 가장 주의해서 접근해야 할 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험 보도에 있어 신문 보도는 짧은 시간 내에 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하고 추측보도나 선정보도에 대한 개연성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3) 재난 보도를 둘러싼 구조적 요소의 고려

매일의 뉴스에서 정확하고 진실한 기사를 만들어내는데 항상 요구되는 구조적 요소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보도가 될 사건을 둘러싼 각 주체들 사이에서 언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판단이 재구성되며 추후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재난)에는 피해자 가족이 있고, 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및 원인 파악에 나서야 할 참사 관련기관이 있다. 또한 정보의 통제와 관리를 맡는 정부와 사회적인 여론을 만들고 사건의 추이를 감시하는 일반 대중이 관여한다. 이 같은 네 주체 사이에 개입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신문은 신중한 보도와 함께 각 영역의 연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 재난(참사) 보도의 영역2)



위의 <그림 1>과 같이 미디어의 재난(참사) 보도는 각 주체들 사이를 연결하는 공론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주체들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설정될 수 있다.

- (1) 정보제공자와 피해자의 관계: 이번 사건에서는 위험발생의 원인규명과 정보제공의 핵심에 군당국이, 피해자는 실종자 가족을 위치시킬 수 있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 (2) 피해자와 정보통제자와의 관계: 정보통제를 맡고 있는 정부는 정확한 피해 상황과 피해 원인 규명이 이뤄져 실종자 유가족의 상심을 달래고 사회적 여론으로 실종자 가족이 받는 왜곡된 시선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도 포함한다.
- (3) 정보제공자와 일반대중의 관계: 정보의 수요가 많은 일반대중은 정보제공자의 신뢰있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군당국은 사건 후 일반대중의 대응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가장 의존성이 높은 정보원이 되기 때문이다.
- (4) 정보통제자와 일반대중의 관계: 오늘날 일반 대중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자격으로서도 또한 사회단체 및 개별

2) 이정춘 (2000)의 현대사회의 위험과 언론보도 내용 중에 재난보도의 영역에 대한 모형을 이번 사건과 결부시켜 재구성하였다. 이정춘 (2000). 현대사회의 위험과 언론보도. 『미디어 사회학』.

모임을 통해 추후 재발할 수 있는 재난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일반대중에게 위험 예방을 위한 홍보를 주도한다.

(5) 정보제공자와 정보통제자와의 관계: 정부는 정보제공자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규모의 재확산 방지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정부는 군당국의 발표에 대해 감시와 규제를 행할 수 있다.

(6) 피해자와 일반대중의 관계: 재난 보도에서 피해자는 일반대중에게 조속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여론 조성과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일반대중은 피해자를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필요한 사회적 조치에 대한 발언을 확대 생산해 갈 수 있다.

3. 천안함 참사 보도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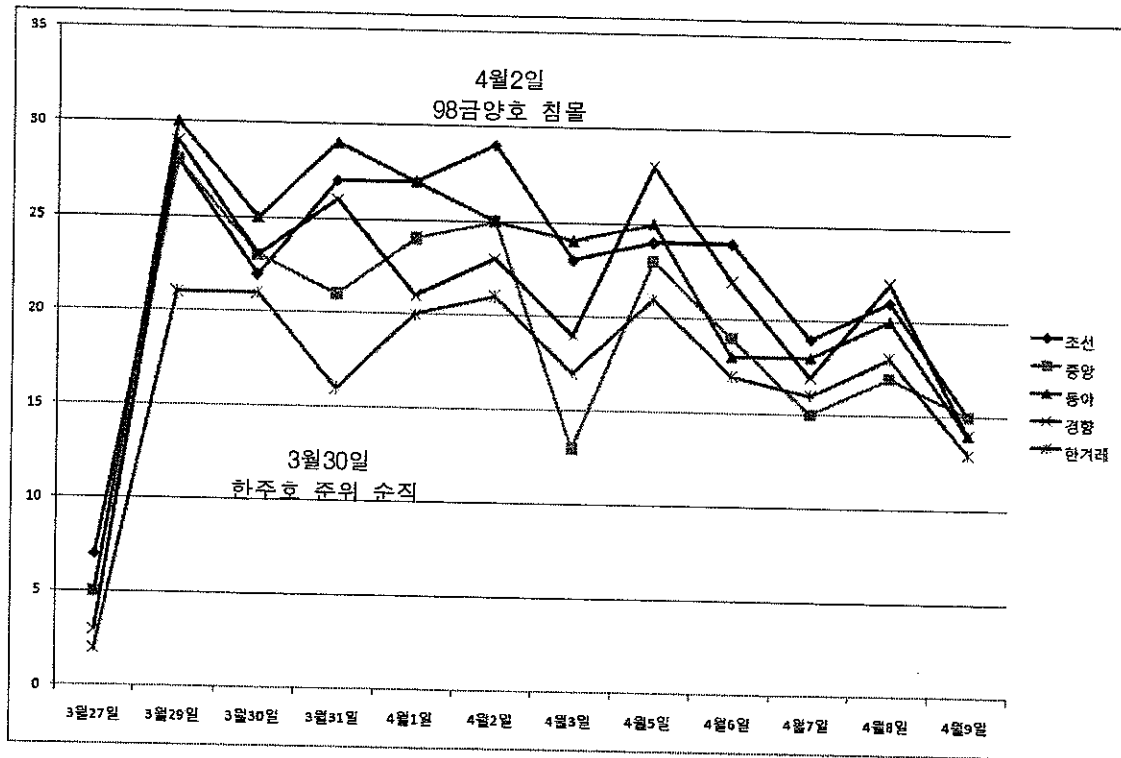
천안함 참사에 대한 속보와 취재경쟁은 지면과 뉴스 분석량을 과다하게 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27일(토)부터 4월 9일(금)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5개 신문은 거의 매일 1면 머릿가사를 천안함 관련 기사로 채웠고, 사설에서도 끊임없이 신문사의 의견과 주장을 실었다. 보도의 양적 과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천안함 침몰의 정확한 원인규명은 의혹투성인 채로 남아 있다.

주요 신문의 천안함 관련 보도 기사 건수는 신문지면 스크랩 서비스인 아이서퍼 2009에서 '천안함'이라는 검색어로 추출된 기사를 지면명에 따라 추출했다. 각 신문의 보도기사 건수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266건, 『중앙일보』 228건, 『동아일보』 260건, 『경향신문』 247건, 『한겨레』 203건으로 총 1204건의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회면 기사가 7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면 기사가 243건, 오피니언면 기사가 1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니언면 기사는 『중앙일보』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 42건, 『경향신문』이 34건, 『동아일보』 28건, 『한겨레』 25건 순이었다. 이 중 사설에서 천안함 참사를 언급한 경우는 『조선일보』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13건, 『동아일보』 12건, 『한겨레』 10건 순이었다(<부록 1> 참조).

<표 1> 주요 신문의 천안함 관련 보도 기사 건수

	3월 27일	3월 28일	3월 29일	3월 30일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6일	4월 7일
조선	7	28	22	27	27	29	23	24	24	19	21	15
중앙	5	28	23	21	24	25	13	23	19	15	17	15
동아	5	30	25	29	27	25	24	25	18	18	20	14
경향	3	29	23	26	21	23	19	28	22	17	22	14
한겨레	2	21	21	16	20	21	17	21	17	16	18	13
합계	22	136	114	119	119	123	96	121	100	85	98	71

<그림 2> 주요 신문의 천안함 관련 보도량 증가추이



주요신문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전반적으로 보도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3월 30일 한주호 준위의 순직과, 4월 2일 수색을 돕던 98금양호의 침몰 추정, 4월 3일 남기훈 상사의 시신 발견, 4월 4일부터 천안함 인양 작업의 본격화 등의 사건 추이를 따라 보도량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의 1면 기사와 사설을 중심으로 천안함 참사보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특징적인 경향들을 정리했다.

1) 사실 확인의 외면

사건 발생 직후 주요 신문의 1차 보도는 사건의 시각, 사건의 예상 인명 피해 규모,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한 군의 공식 발표에 의존해 보도가 이뤄졌다. 주요 정보원은 함동참모본부였으나 신문별로 추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익명의 해군 관계자 및 군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에 사건 원인 추정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쏟아냈다.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서는 1차 보도에서 불분명했던 사건 정황을 바로잡고 추가로 공개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성급한 추측과 예단이 뒤엉켜 보도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정부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뢰로 인한 참사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배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사고 원인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중략.. 정부는 기뢰의 주체가 누구인지 현재 가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 조선일보 3월 29일 '기뢰 폭발 가능성' 집
중 조사

군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정부는 기뢰에 의한 폭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동아일보 3월 29일 “동강난 배 속에 서라도...살아만 있어다오, 꼭”

3월 29일(월) 주요 신문은 박성우 합참 공보실장이 진행한 28일 브리핑 내용을 기초하여 보도했다. 이날 합참 공보실장은 함정이 폭발음이 들린 후에 함미와 함수로 갈라진 뒤 함미는 바로 침몰했다고 밝혔다. 현재 함수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고 함미는 침몰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외부적 충격’에 대해 기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한 내용은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으로 ‘기뢰 폭발 가능성을 집중조사 하고 있다는 내용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사 내용 중에는 정부가 기뢰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주체가 누구인지는 가리기 힘들어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동아일보』에서도 기사 내용 중에 군과 정부 모두 신중한 태도이지만, 아무래도 기뢰에 의한 폭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내비쳤다.

북에서 떠내려온 기뢰보단 의도적으로 설치된 기뢰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이었다 - 조선일보
3월 30일 “북한 개입 가능성 없다고 한 적 없다”

정부와 군 당국자들은 29일 “침몰의 정확한 원인은 천안함 함미의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한 뒤에나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기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누가 기뢰를 설치했는지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정부 당국자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 소행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물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이 사건은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3월 30일 “기뢰 의한 폭발 결론내려도 북한소행 입증하긴 어려워”

3월 30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북 개입 가능성이 없다 한 적은 없다”고 밝혔고 모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고 검토한 다음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6.25 당시 북한이 3천여기의 기뢰를 설치했는데 100% 제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과 외부 테러용 기뢰 가능성도 열어놓고 점검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조선일보』는 의도적으로 설치된 기뢰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이었다고 추측했다. 『동아일보』는 천안함 침몰 원인 규명이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 해당 기사에서는 실명 정보원이 단 한명도 언급되지 않은 채, 정부와 군 당국자들, 군 당국자, 정부 당국자, 군 관계자들이 언급되면서 북한의 소행설 입증이 확실하더라도 정확한 물증 제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단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국가정보원이 내부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소속 여러 의원들이라고 밝힌 내용에서는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어뢰 폭발 내부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으로선 내부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사건 원인 규명이 이뤄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인 것 같은 다수의 가설과 추측이 모두 동등하게 보도의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추측에 대한 가설 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익명 정보원의 진술에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경향이 농후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군 관계자는 “속초함이 당시 레이더상의 물체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의 반잠수정으로 간주해 발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합동참모본부는 천안함 침몰과 속초함의 발포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해 왔다. 군 관계자들의 증언은 속초함의 발포는 천안함 침몰 직후 군 당국이 이를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초계작전을 펼친 결과였음을 확인해 준다 - 동아일보 4월 1일, 속초함, 대북경계지시 받고 발포

『동아일보』는 4월 1일자 보도에서 다른 군 관계자라는 익명의 정보원의 말을 인용해 지금까지 합동참모본부에서 밝힌 내용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듯 다른 신문에서 보도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했다.

군 소식통은 1일 “사고 직후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이 2함대사령부에 휴대전화로 첫 보고를 할 때 “피격당했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교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파악됐다”고 말했다. .. 최 함장이 종합적인 상황 파악을 한 뒤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본능적인 표현을 쓴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략) 군 당국은 1일 천안함 침몰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문들을 해명하는 브리핑을 했지만 천안함 함장의 최초 보고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조선일보 4월 2일, 최함장 “피격당했다” 첫 보고

『조선일보』 역시 4월 2일자 보도에서 군 소식통이라는 익명의 정보원의 말을 인용해 군 당국이 공식적인 브리핑에서 빼버린 최원일 중령의 교신 기록이 파악돼 ‘피격’설을 확신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4월 5일(월)자 『중앙일보』는 단독으로 캡슐형 기뢰에 의한 버블제트 효과가 분명해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TOD(열상감시장비)에 촬영된 천안함의 침몰 과정과 천안함의 절단된 단면, 북한 잠수함정과 반잠수정의 동향 등을 종합해볼 때 사출형 기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략) 군 당국은 사출형 기뢰가 어선 등 북한의 일반 선박에 의해 부설됐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 중앙일보 4월 5일, 군, 어뢰 담은 ‘캡슐형 기뢰’ 추정

『중앙일보』의 사출형 기뢰 추정설과 대조되는 『경향신문』의 ‘전단파괴’ 가능성 제기 기사는 보도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1200t 급으로 설계된 천안함에 2000t 급 무기체계를 탑재한 사실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중략) 열상관측장비(TOD)로 관측된 천안함의 절린 허리부분의 모습으로 볼 때 ‘전단파괴’에 의

한 침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단파괴는 뱃머리와 꼬리 부분 양쪽에서 힘이 가해져 배 중간 부분에 피로가 누적되다 마치 가위로 자른 것처럼 부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노인식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 교수는 “(전단파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공학적으로 봤을 때 낮다”며 “무게의 절대량보다 전단파괴는 무게의 분포가 문제로 (무기체계의) 배치 위치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가능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4월 6일, 1200톤급 천안함, 2000톤급 무장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제기한 전단파괴 가능성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도 내용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거치는 태도를 보여줬다.

2) 주장의 확대 전달 - 몰아가기식 보도

(1) 북한 개입 가능성의 끈질긴 주장

천안함 침몰 참사와 관련한 사설이 3월 29일(월)부터 주요 신문에 실렸다. 대체적으로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르게 예단하거나 결론을 내려서도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추리를 강조하는 태도를 앞세우는 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났다.

군은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천안함 침몰 해역의 수심이 3m 정도밖에 안 돼 잠수함이 동원됐을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특수부대가 반(半)잠수정을 이용해 어뢰 공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군사 도발이다 - 조선일보 3월 29일 사설, 실종자 구출과 진상 규명에 총력 집중하라

기뢰나 어뢰 공격이 아니고선 1200t에 이르는 전투함이 순식간에 두 동강 날 수 없다는 것이다. ..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나 기뢰를 이용한 의도적 공격으로 드러날 경우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북한이다. ... 천안함이 북한의 기뢰 또는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결정해야 할 고비를 맞게 된다 - 조선일보 3월 29일 사설, 국가적 위기에 대한민국 저력 보여주자

『조선일보』는 여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북한에 의한 공격이라면서 가정은 두고 대한민국 해군 함장이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한밤중에 폭발, 침몰해 해군 장병 수십명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태는 그 자체로도 준전시(準戰時)나 다를 것이 없다³⁾고 주장했다. 김정일 방중 시기가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져 있는 시

기와 겹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연관성을 부각했다.

또한 사태에 대한 포격을 처음부터 "북한 공격으로 보고 대응 사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면 아무 잡음도 뒤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명확히 하지 않으니 "한·미합동훈련 중 침몰했다"라는 악의적인 의혹까지 따르는 것)이라고 단정 짓는 사실을 통해 북한 개입설에 대한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대책들을 철저히 준비해 현명하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각오다. 가장 긴장감을 갖고 대비해야 할 사태는 북한의 무력 도발로 침몰했을 경우다 - 중앙일보 3월 29일자 사설, 천안함 침몰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만의 하나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다면 크나큰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 선부론 질책과 논란으로 해군은 물론 전체 군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태는 절대 금물이다 - 중앙일보 3월 30일자 사설, 책임 논란보다 마지막까지 구명에 매달릴 때다

이번 사태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든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이면 국가는 중대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 중앙일보 3월 31일 사설, MB, 냉철·단호·소통의 리더십 보여야

아직 침몰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외부 충격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퇴전 기뢰군 북한군이 개입했을 개연성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 중앙일보 4월 1일 사설, 중차대 안 안보문제를 놓고 정치개입해선 안된다.

『중앙일보』는 "만의 하나", "북한의 무력도발이면", "북한군이 개입했을 개연성도 그만큼 커진 셈" 등의 표현을 통해 조사단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 북한의 개입여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의 공격이라는 확증이 있는데도 파장을 우려해 호도하거나 은폐한다면 파장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북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1999년 이후 세 차례의 해전 도발 때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수호 차원의 문제다 - 동아일보 3월 29일 사설, 천안함 '장병구조, 원인 규명, 후속대응' 만전을

『동아일보』도 북한의 개입이 확실해질 경우,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4월 2일 사설에서는 북한에

- 3) 조선일보 4월 2일 사설, 나라 품격 굶아먹는 인터넷 속 들쥐들
- 4) 조선일보 4월 2일 사설, 미묘한 시기에 이뤄지는 김정일 중국 방문
- 5) 조선일보 4월 3일 사설, 정치권이 해선 안 될 일과 군이 해야 할 일
- 6) 중앙일보 4월 2일 사설, 철저한 조사 통해 천안함 침몰 전모 밝혀야

서 한미 독수리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천안함 침몰과 우리의 내부 불안을 대남 공세에 역이용하는 전술로 판단된다는 주장을 신기도 했다.

주요 신문의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정의 주장이 엇갈리게 된 계기는 4월 2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발언한 내용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4월 3일자 신문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김태영 국방장관의 의견에 대해 신문별로 의미의 확대가 이뤄진 차이가 분명했다. 『조선일보』는 제목을 “김 국방, 어뢰 가능성이 더 실질적”이라고 뽑았고, 『중앙일보』는 “김 국방, 어뢰 직접 타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 『동아일보』는 “천안함, 기뢰보다 어뢰 피격 가능성 北잠수정 2척 행방모연...연관 분석”이라고 달았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사고원인 혼선 키우는 국방장관”을, 『한겨레』는 “김국방, 어뢰 가능성-청와대, 단정 못한다”는 식으로 조중동의 입장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을 박신규 청와대 대변인 발언과 대조해 원인을 예단해선 안된다는 신중론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4월 6일자 보도에서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이 북한 잠수함 2척중 1척에 대한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던 잠수함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는 증거를 군당국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루에 수차례씩 기지를 드나들던 잠수함이 26일에는 단 1차례 움직였던 것을 볼 때 기지에서 80여km 거리의 백령도 인근까지 '장거리 작전'을 수행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조선일보 4월 6일, “상어급 北잠수함 사라져 1척 그날 행적 아직 몰라”

그러나 보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일보는 1척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장거리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문장을 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4월 5일 사설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어뢰 공격 가능성 언급이나 북한 잠수함의 기동 확인, 지진파의 강도로 볼 때 북의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주장이 한층 설득력을 더해가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에 무게를 실었다.

천안함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조사단의 본격적인 활동 전개를 두고서도 『조선일보』는 “사고 원인이 북한 어뢰나 기뢰 공격으로 밝혀진다면”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중앙일보』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 제공자로 북한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라거나 “만에 하나 북한 공격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응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⁷⁾. 또한 “지금은 북한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이다⁸⁾”며 의미의 확대를 내비쳤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이 북한의 관련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⁹⁾.

7) 동아일보 4월 5일 사설, 오로지 진실 위에서 대응해야 국제 신뢰 얻는다

8) 중앙일보 4월 6일 사설, 천안함 한·미 공동 원인규명에 거는 기대

9) 중앙일보 4월 8일 사설, 장병들 증언 토대로 과학적 조사 박차 가하길

10) 동아일보 4월 6일 사설, 안보에 관해 국회와 정치권이 냉철해야 할 이유

(2) 군의 정보 통제왜곡 지적이 팩트 확인보다 비판 과잉으로 비춰져서야

한편 군의 기밀주의 혹은 군의 자의적 정보 통제의 방식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와중에 군의 안이함과 비상상황 대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는 문제제기는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군의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신뢰 잃은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이용한 정치적 활용을 의심하고 확대시키는 경향이 지속적이고 무리하게 제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천안함 침몰 전후 정황을 규명할 핵심 단서인 교신록에 대해선 '군사기밀을 이유로 제차 공개를 거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자의적 보안·통제가 불신을 키우면서 국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아군끼리의 오폭', '정부가 제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침몰 원인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 등 갖가지 음모설이 난무하고 있다' - 경향신문 4월 1일, 의혹 키우는 기밀주의

군은 이미 이번 사건을 통해 위기 관리 능력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어떻게든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모습도 씩 유쾌하지만은 않다. 더욱이 군 당국은 계속 된가 쉬쉬하면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만약 군의 이런 태도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한 군 수뇌부의 알뜰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 큰일이다 - 한겨레 3월 30일 사설, 군의 총체적 역량 한계 드러낸 천안함 침사

김 장관은 또 기뢰가 침몰 원인일 가능성고 관련해 '과거 북한이 뿌린 기뢰가 수거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서해에 한국군 기뢰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참사 해역에 기뢰가 많았으며 우리 쪽이 북쪽 침투를 막으려고 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과거 근무자의 증언이 나온다' - 한겨레 3월 31일 사설, 국민 불신 키우는 군과 정부의 정보 통제·왜곡

『경향신문』은 4월 1일 1면 기사에서 군의 정보 통제가 여러 음모설을 퍼트리는 원인제공을 한다며 제기되고 있는 음모설의 종류를 짚었다. 군의 안보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갖가지 추측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겨레』는 군의 정보 통제가 군 수뇌부의 알뜰한 계산이 아니냐는 의문 제기와 김태영 국방장관의 발언이 과거 근무자의 증언과 비교할 때 일치하지 않는 점이 발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의문의 14분'¹¹⁾, '앞당겨진 사고시각...뭘 감추고 있나', '군의 끝없는 은폐와 거짓말', 『경향신문』은 '의혹 키우는 기밀주의', '군, 함미 침몰 담긴 영상 숨졌다', '의문의 7분...군, 발생시각·지점 은폐 의혹', '신뢰 잃은 정부일수록 의혹이 부른다', '군, 없던 TOD영상 3번째 공개', '군 지휘부 무능 드러낸 천안함 조사 결과' 등의 제목에서

11) 한겨레 3월 30일, '의문의 14분'

보여주듯이 비밀주의와 말비꾸기를 계속하고 있는 군 지휘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건 발생 시각의 계속된 정정과 군 당국의 최고 책임자들의 오락가락하는 발언이 국민들과 언론의 의심을 받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이 군의 해명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는 것보다 비판의 과잉으로 모든 정보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참사 사건에 대한 언론의 공론장적 역할

해군 초계함의 침몰로 46명의 장병이 실종되고, 실종된 장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함미 부분의 인양 작업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국가의 대응전략과 똑같은 참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과 같은 참사 사건에 대해 언론은 각 구조적 영역에 있는 주체들 간의 원활한 관계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디어(media)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의미와 필요성이 있다. 언론보도 전반에 대해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1) 정보제공자와 피해자의 관계

군 당국은 사고가 터진 뒤 사고 경위와 구조상황에 대해 초기부터 적극적인 해명과 설명이 필요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북한 기뢰 폭발에 무게를 두다가 김태영 국방장관의 어뢰 공격설의 거론 등 군 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다. 게다가 사고 발생 시간이 9시 45분에서 30분으로, 또 25분에서 다시 22분으로 당겨지는 등 군의 발표 내용이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사고 시각은 배가 가라앉기 전까지 수십명의 생사를 가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판가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실종자 가족들이 제기한 사고 시각의 주장과 군당국이 발표한 내용 사이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군 당국의 설명에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실종자 가족 및 일반 대중에게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사고의 초기 대응과 평소 비상탈출 훈련의 정확한 수행 여부 등이 분명하게 밝혀지도록 애써야 한다.

반대로 언론은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실종자기족협의회회의 이정국 대표는 CBS의 한 라디오 프로에서 실종자 가족인 현장방문단 참관단을 파견했을 때 현장상황은 함수와 함미가 다 유실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해군의 적극적인 실종자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갔다고 하며 언론 보도의 잘못을 꼬집기도 했다. 군의 일방적인 보도 브리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실종자 가족들에게 가장

정확한 상황 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3월 27일 실종자 가족들과 취재진이 사령부에 몰려들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중무장한 사병들이 가족과 취재진 앞에 나타난 일도 있었다. 언론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군당국의 대우가 적절한지, 실종자 가족이 혹여 군당국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보도해줄 의무가 있다. 언론이 군의 실종자 가족에 대한 대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바람직한 보도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경향신문』이 3월 29일자 사설에서 “군 당국이 가족에게 사고 소식도, 치료하는 병원도 알려주지 않았고, 상황설명도 제대로 못했다. 항의하는 가족을 군병력을 동원해 막는 과잉 행동도 있었다. 위기 대처가 자기 고위 과업인데도 군당국은 우왕좌왕했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군당국은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려 그들을 돌봐주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천안함 침몰 4일째를 맞는 29일 함미의 깨진 틈으로 산소통 주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군당국자는 “만약 생존자가 있다면 산소 공급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언론 중에 산소탱크 1개 용량이 1인 기준 4시간이며 추정인원 46명을 가정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마치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오히려 추후 사실을 알게 된 실종자 가족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보도태도였다.

언론이 군당국의 정보 발표에만 의존해 보도하는 것도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더 나아가 언론사간의 속보 경쟁으로 인해 익명 정보원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거나,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못한 선부른 예측과 오보를 내보내는 것은 더욱 비난받을 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와 정보통제자와의 관계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정부는 군당국의 실종자 수색과 사건 규명의 정확한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예우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언론이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종자 가족에 대한 정부의 대우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도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추가 인명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다. 수색 작업을 돕던 한주호 준위의 사망과 98금양호 선원들의 실종이 그러했다. 언론은 이들의 희생 가치에 대한 의미를 보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뢰 있는 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원인 규명 과정의 철저한 조사에도 힘쓸 수 있도록 언론의 지속적인 견제도 요구된다.

(3) 정보제공자와 일반대중의 관계

군 당국의 철저한 사고 분석을 보도하는 것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자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익명의 정보원을 통한 여러 추측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반 대중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잘못된 대응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의 작업과 의혹에 대한 몰아가기식 보도를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군사 작전이나 군사 전략 등의 과도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언론의 책임이다.

이번 참사 보도에서는 사실 확인 작업이 선제 인양 작업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서도 여러 익명 정보원의 등장과 확인이 안 된 사실들 간의 관계성을 부각시켜 복의 개입설을 강조하거나 천안함 관련 전역 해군이나 혹은 실종자 가족들의 여러 추측들을 검증 없이 보도하여 혼란을 가중한 측면이 컸다.

군 당국 뿐만 아니라 생존 장병과 정부 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각적인 사실 확인과 사실추적적인 접근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서는 “인터넷에는 악의적이거나 유언비어 수준의 댓글을 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의 발표 내용이 오락가락하면 악의적인 누리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셈이다”며 정보 통제의 결과가 악의적인 누리꾼의 댓글을 양산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군 당국의 정보 브리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취재가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한 제한된 정보만으로 단정하지 않으려 한 태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의 요구가 자칫 비판 과잉으로 내비쳐져 어떤 사실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4) 정보통제자와 일반대중의 관계

언론은 정보통제자에게 일반대중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인터넷 누리꾼들의 댓글을 언급한 기사가 더러 있었다. 여론의 여러 움직임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혹 증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나라 품격 깎아먹는 인터넷 속 들쥐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들쥐처럼 몰려다니며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이들의 비열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누리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 현장 방문을 비꼬거나 군의 대응능력 미숙과 군에 대한 신뢰 실추가 가져온 결과가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언론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도하여 의혹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신문 사설에서 2001 미국의 9.11 사태와의 비교가 등장한 것은 4월 1일(목)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설이었다. 『조선일보』는 “우리도 9·11사태 당시 미국 조야가 혼연일체가 돼 걸었던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9·11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즉각 범국가적인 비상체계를 갖췄고, 여야 정치권은 상·하원에서 만장일

치로 결의안을 채택해 그런 정부와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다면 작금의 사태에서도 정치권의 분열보다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중심을 실어주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9.11테러 당시 미국 정부는 사전 첩보를 입수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사건 직후에는 정치적 이념을 뛰어넘어 외교·안보 문제만은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면 정부 당국과 군의 초기 대응의 미숙은 있었지만 이보다는 국가의 구조와 안보 대응이라는 화급한 사안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듬해 비로소 초당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0개월에 걸쳐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에 힘썼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선일보』 역시 미국이 10개국 1200명을 조사했고 이들이 검토한 정부 문서만 250만쪽이 넘는다면 국민적 신망을 받는 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미국 9.11 테러에도 정부와 군 고위직이 사퇴한 사례는 없다고 사설에서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진상보고를 위해 참석한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로 정부에 힘을 보냈고 국민도 성조기를 집이나 자동차에 내걸고 애국심을 과시했다고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이슬람 테러단체인 알카에다의 소행임이 분명했는데도 치밀하고도 끈질긴 조사를 통해 사전에 테러를 막지 못한 내부의 문제까지 밝혀냈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에 대해 거는 기대를 나타냈다.

언론은 정보통제자에게 진상조사에 힘써줄 것을 기대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유사 참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과 대중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5) 정보제공자와 정보통제자와의 관계

정부는 군당국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규모의 재확산 방지를 예방하는 조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군당국의 발표에 대해 감시와 규제도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군당국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렴하되 군당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방어할 수도 있다.

언론은 군당국과 정부간의 입장차이가 무엇이며, 정부가 군당국에게 혹은 군당국이 정부에게 요청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군당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공개 수위가 정해지지 않아 정부의 입장에서나, 군당국의 입장에서나 군사 정보의 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군은 이번 사건과 같은 참사 사건에 있어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대한 후속 조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6) 피해자와 일반대중의 관계

언론은 실종자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반 대중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서 일부 언론 기자들이 보여준 경솔함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생존자 가족으로 위장 잠입한 기자가 생존자 가족들에 의해 발각되고, 더 나아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무리한 취재를 요구하다가 경찰 신고를 당한 사건들은 언론의 사명을 주장하기 전에 매우 경솔한 행위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¹²⁾.

피해자를 둘러싼 언론보도는 일반대중에게 조속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여론 조성과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기여한다. 일반대중은 피해자를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필요한 사회적 조치에 대한 발언을 확대 생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에 대한 보도 지침을 수립하고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심리적 안정의 보호를 위해 가급적 통곡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도하여 불편함을 느끼도록 해서도 안된다.

4. 결론을 대신하며

이번 천안함 참사 보도를 지켜보면서 중요하게 깨달은 점은 어느 한 주체의 영역에서만 판단하고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군과 관련되면서 군사 정보와 정부의 안보위기대처 능력이 노출될 소지가 있었고 반대로 정보의 과잉 통제가 사실의 은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그러나 언론은 참사 사태를 극복하는 주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의혹 증폭에 대해 언론이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각 주체영역간의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참사 사건에 대해 언론이 가져야 할 위치이자 사명이다. 공포와 혼란을 강조하기보다 정확하고 확인된 사실의 증명과 보도에 치중함으로써 전국민이 침착하게 사태 추이를 지켜볼 수 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가 희생자들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참사 보도가 과거 참사 사건에서 언론의 문제점으로 빈번하게 지적됐던 피해중심 보도나 피해자의 분노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벗어나 사고 원인과 대처에 대한 심층적 기사에 주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사건의 원인인과 대처에 있어 보복 전쟁을 주장하거나 특정 여론을 확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실로 몰아가기식 보도로 반영하는 것은 올바른 저널리즘 보도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차분하게 기다리며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12) 미디어오늘 (2010. 3. 31), 미디어오늘 (2010. 4. 7), 기자협회보 (2010. 4. 7)

이에 기자협회보에서 제기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제정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은 △피해상황 전달 보다 향후 전개될 추가 피해 예방 및 방지 주력 △재난구조본주에서 정한 통제선 준수 △불확실한 내용의 검증 및 유언비어 발생과 확산 억제 △피해자와 가족의 프라이버시, 명예, 심리적 안정의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기자협회보, 2010. 4. 7.).

<참고문헌>

김재영 (2003). 참사보도에 매몰된 개인의 인격권. 『언론중재』, 23권 2호, 70~75.

이 연 (2003).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재난보도 준칙(가이드라인)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한국기자협회 주최 제24회 기자포럼 발제문.

송종길 (2003). 『사회위기와 TV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북스.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이재경 역 (2009).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한국언론재단.

Willis, J. & Okunade A. A. (2006). Reporting on risks: The practice and ethics of health and safety communication.

송해룡·김원제·조항민 역 (2006). 『위험보도: 저널리즘과 과학적 사실의 충돌』. 커뮤니케이션북스.

미디어오늘. 2010년 3월 31일자

미디어오늘. 2010년 4월 7일자

기자협회보 2010년 4월 7일자

<부록 1>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된 신문별 사실

일 자	신문별 사실 제목
3월 29일(월)	<조선>실종자 구출과 진상 규명에 총력 집중하라, <중앙>천안함 침몰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중앙>사고 원인, 성급한 예단 말아야, <동아>천안함 '장병구조 원인규명, 후속대응' 만전을 <경향>이 위기를 믿음직스럽게 대처하고 있나, <한겨레>천안함 참사, 철저한 구조 노력과 원인 규명
3월 30일(화)	<조선>국가적 위기에 대한민국 자력 보여주자, <중앙>책임 논란보다 마지막까지 구명에 매달릴 때다, <동아>천안함 실종자 구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경향>천안함 참사, 침착하고 냉정한 자세 필요하다, <한겨레>군의 총체적 역량 한계 드러낸 천안함 참사
3월 31일(수)	<조선>천안함 사태에 대한 결단의 자세도 갖춰나가야, <중앙>MB, 냉철·단호·소통의 리더십 보여야, <동아>백령도 앞바다는 死鬪의 현장이었다, <경향>경찰이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 잠입하다니 <한겨레>국민 불신 키우는 군과 정부의 정보 통제 왜곡
4월 1일(목)	<조선>대한민국 국민을 뒤흔치게 만들어준 거룩한 희생, <조선>'非常한 조치'와 '正常的 대처' 병행, 나라 中心 잡을 때다, <중앙>중추대한 안보문제를 놓고 정치게임을 해선 안 된다, <중앙>영웅 한 준위의 숭고한 희생 헛되게 하지 말자, <동아>천안함 수습, 억측도 몰아붙이기도 도움 안 돼, <경향>한주호 준위,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경향>여전히 미답지 않은 군의 구조활동, <한겨레>'유비무환'은 헛된 구호였는가
4월 2일(금)	<조선>나라品格 값어치는 인터넷 속 들쭉들, <조선>미묘한 시기에 이뤄지는 김정일 중국 방문, <중앙>철저한 조사 통해 천안함 침몰 전모 밝혀야, <동아>국가안보의 기본까지 허물어선 안 된다, <경향>신뢰 잃은 정부일수록 의혹이 부른다, <한겨레>군의 끝없는 은폐와 거짓말
4월 3일(토)	<조선>대통령 한 준위 빈소 찾아 무공훈장 수여 지시 잘했다, <조선>정치권이 해선 안 될 일과 軍이 해야 할 일, <동아>軍은 국민의 신뢰 잃지 않도록 自戒해야, <경향>대통령까지 나서 북한 개입 증거 없다는데, <한겨레>무책임한 '북한 공격설' 유포, 저의가 무엇인가
4월 5일(월)	<조선>구조 중단 요청한 천안함 가족 뜻 헤아려 최선을 다해야, <조선>軍은 기초 정보 정확성실하게 설명하라, <중앙>냉정 되찾고 천안함 인양 지켜보자, <중앙>바다로 달려나간 이름답고 눈물겨운 민초들, <동아>애도와 배려 속의 '천안함 수습 새 국면', <동아>오로지 眞實위에서 대응해야 국제 신뢰 얻는다, <경향>천안함 진상조사 신뢰 확보가 관건이다, <경향>부실한 조난 대응체계 드러난 금양호 사고, <한겨레>기습 아프고 감동적인 실종자 가족들의 결단
4월 6일(화)	<조선>대한민국 신뢰가 천안함 진상 조사에 걸려 있다, <조선>北 잠수정 탐지 능력이 10~50% 정도라면, <중앙>천안함 한미 공동 원인규명에 가는 기대, <동아>安保에 관해 국회와 정치권이 냉철해야 할 이유, <경향>봉은사 발언 안상수 대표의 국회연설을 듣자니 <한겨레>천안함 침몰 조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면
4월 7일(수)	<조선>北 군사 정보 공개할 것과 해선 안 될 것, <중앙>군사기밀 유출은 또 다른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 <동아>천안함 '의혹 해소와 기밀 관리' 접점 찾아야, <경향>청와대 메모에서 드러난 천안함 대처 수준, <한겨레>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의 상징 '금양호 외면'
4월 8일(목)	<조선>천안함 장병 증언이 '명확히 한 것'과 '더 밝힐 것', <조선>천안함 침몰 '78분 후'에야 공군기 發進시킨 이유는, <중앙>장병들 증언 토대로 과학적 조사 박차 가하길, <동아>천안함 원인 확정되면 응징도 문책도 단호해야, <한겨레>생존자 증언 들어도 답답함은 여전하다
4월 9일(금)	<조선>천안함 희생자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애무 다해야, <중앙> 정치권이 근거 없는 의혹만 증폭시켜서야, <동아>천안함 사건 총체적 대응능력이 국가신인도 가른다, <경향>군 지휘부 무능 드러낸 천안함 조사 결과, <경향>오락가락하는 이 대통령 발언 진의 묻자

방송의 천안함 참사 보도 진단

..... 도형래(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천안함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 천안함에 타고 있던 군장병의 일부만 구조되고 50여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온갖 이견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문제는 돌연한 함선의 침몰 사고에 대해 누구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서는 추정만을 일삼고 있고 추정마저도 일관성이 결여돼 국민들이 누구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공공성 표방하는 지상파 방송도 국민의 혼란에 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주하 기자가 사고당인인 26일 MBC 뉴스 속보를 진행하면서 천안함 침몰 소식을 전할 당시, 북한 개입 가능성을 전했다. 사실의 확인도 되지 않은 군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다. 결국 사고 10여일 지난 지금까지 실체 없는 말로 떠돌고 있다.

또 방송은 국방부와 해경, 민간 전문가들을 오가며 무수한 사고원인이 될 법한 것들을 모두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잠정적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발생 3일째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인 OBS는 석연찮은 오보를 냈다. 실종자 주검 4구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믿을 만한 군 내부의 취재원에서 들었다는 이 소식은 오보로 슬그머니 지취를 감췄다.

12일, 천안함이 함미가 끌어올려졌다. 함미의 겉모습만 보고 전문가들은 “외부 폭발이다, 내부폭발이다” 의견이 분분하다. 한 전문가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중급어뢰가 확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사 말미에 다른 전문가는 눈어림으로 짐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사의 헤드라인은 ‘중급어뢰’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과 실종자의 가족들과 해군에서 배를 타고 있는 수많은 국 장병들과 자신의 아들 딸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다.

언론이 무엇을 해야 할까? 백령도에만 22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있다고 한다. 국방부, 해군 사령부, 해양경찰청 등에 나가 있는 기자들까지 합하면 아마어마한 수의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국민들의 속을 시원해

줄만한 보도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군과 당국에 있다.

군과 당국이 뒤로 정보를 감추고 있을 동안 백령도와 국방부, 해경에 나가있는 수많은 기자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추측성 보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이 같은 추측성 보도는 의혹에 의혹을 낳고 이제는 언론사 조차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추측이었는지 분간해 내지 못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군과 당국이 모든 정황을 공개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 언론에 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잭 풀러는 일치(correspondence)와 일관성(coherence)이라는 두 개념을 언급하며, 저널리스트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일관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Fuller, 1996, 윤호진 2005 재인용).

윤호진(2005)은 일치와 일관성 모두 뉴스 보도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에 분명하지만 진실 추구라는 저널리즘 가치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일관성이라는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말한 일치는 사실과 다르지 않음, 정확한 사실을 뜻하고, 일관성은 내용적인 일관성을 뜻하는 말로 크게는 시대적 소명 또는 역사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좁혀 현재의 상황에 대입하면 일관성이 결여된 보도는 보도의 신뢰를 떨어뜨려 중국에는 정확한 사실이 보도되더라도 수용자들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게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방송보도도 언론사들의 행태를 부화뇌동하거나 혹은 앞장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모습은 방송 본연의 모습에서 어긋난 행태일 것이다.

일면 천안함의 침몰은 대규모 재난 특히 인위적 재난으로 우리사회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강만석(1999)은 방송보도가 사회적 위기 상황을 보도하면서 취해야 할 적절하고 올바른 보도 행태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미시적 보도에 그치지 말고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종합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둘째, 뉴스의 핵심을 파악해서 보도함으로써 이슈와 이벤트 보도가 시청자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보도 내용이 시청자의 객관적 판단을 혼란케 하는 정보가 아닌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기자가 파악한 내용의 출처와 경위를 정확히 알려야 하고, 기자 개인의 이슈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위기 보도의 핵심은 매체 수용자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송종길과 이동훈(2004)는 방송의 위기보도가 다른 매체보다 더욱 엄정해야 한다며 방송 매체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보도의 부작용은 대부분 방송보도의 영상과 음향이 가져다주는 현실성, 현장감의 역작용에 기인하고 있다. 송종길과 이동훈의 방송의 위기보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보도나 갈등보도 등의 사회 위기상황을 전달하는 TV뉴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회적 위기 상황이 수반하는 부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청자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위기상황을 유발한 공공 문제에 대한 기자의 전문성 강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다.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학자들은 언론의 전문성 강화를 주장한다.(Cunningham, 2003, 송종길 재인용) 기자가 사회적 위기 상황을 유발한 공적 문제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가 공적 이슈에 깊이 개입하는 경우 정보원 또는 뉴스 출처의 편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Izard, 1982, 송종길 재인용) 기자가 공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견해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해서 보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자칫 뉴스 내용 자체가 편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 사회적 위기상황에 대한 TV뉴스의 과잉 개입이다. 이것은 기자 개인의 신념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취재시스템 또는 보도시스템 외적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 TV뉴스를 포함한 언론이 사회적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객관성과 중립성, 균형성 등의 기본적 가치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가치들은 더욱 준수되어야 할 덕목이다.

2. 보도분석

천안함 사고가 방송3사의 메인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한 날(3월 27일)부터 지난 4월 9일까지 2주간의 보도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지상파 방송 3사의 메인뉴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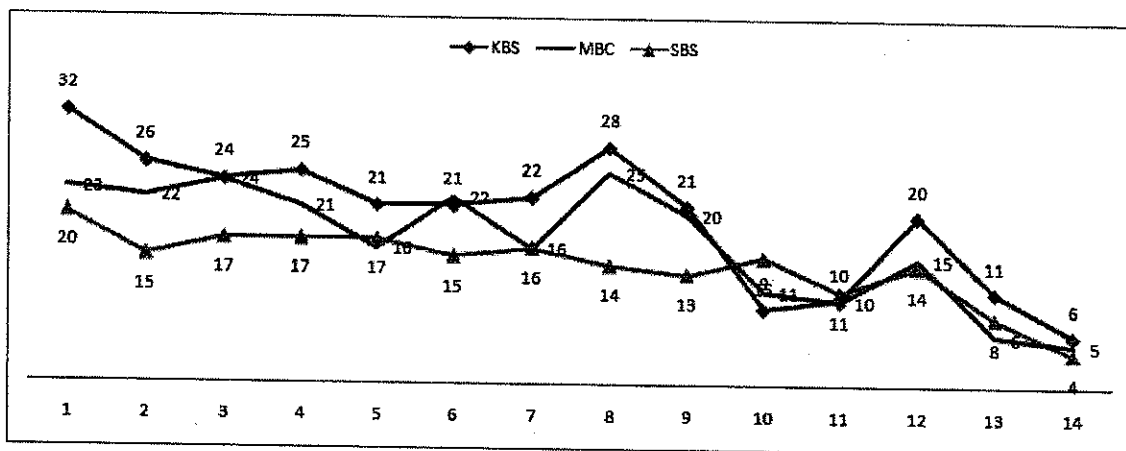
1) 보도량

(1) 전체 보도건수

	기사 수
KBS	276
MBC	236
SBS	196
계	708

- 14일간 방송3사는 708건의 보도를 해, 일일평균 50.5건의 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가장 많은 보도를 한 방송사는 KBS인 것으로 조사됐다. KBS는 대상기간 동안 276건의 보도를 해 일일평균 19.7건의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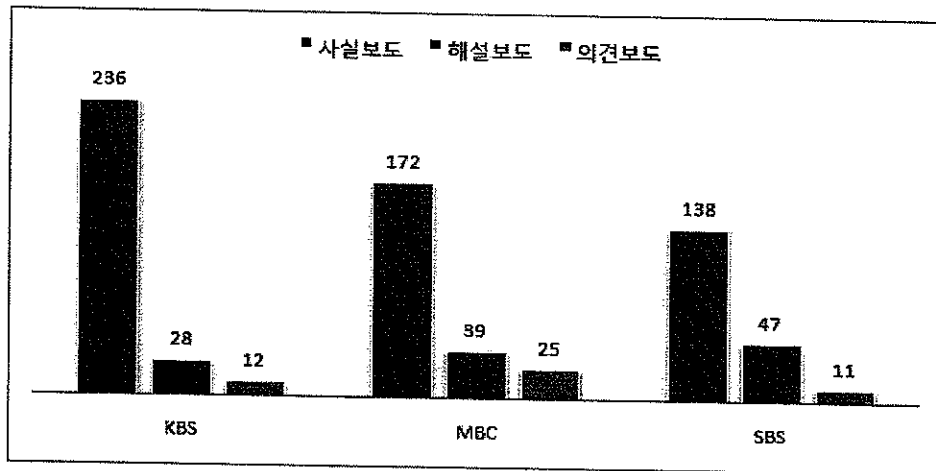
(2) 시기별 보도건수



* 사건발생일 (D + 몇 일)

- 방송 3사의 보도는 당건 발생 다음날 가장 많은 보도가 나갔고, 점차 조금씩 보도량이 줄어들다, 발생 후 8일이 지난 4월 3일, 천안함 실종자 가운데 맨 처음 남기훈 상사의 시신이 발된 된 날 보도량이 다시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보도 유형



- 보도의 유형을 사실에 대한 직접전달 이른바 스트레이트 보도와 이를 해설한 해설보도, 기자나 언론사의 시각이 드러난 의견보도로 나눴다.
- KBS는 사실보도의 비중이 85.5%로 가장 높은 반면 해설보도(10.1%)와 의견보도(4.3%)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MBC는 의견보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는 해설보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3) 보도내용

	KBS	MBC	SBS	계
브리핑 내용 전달		31	23	96
사고원인규명	53		27	139
사고 현장 스케치		20	16	66
수색경과보도	64	48	32	
유가족 동정	17	17		52
청와대/정치권 동정	9	3		29
인양작업	18	13	16	47
사고발생시각	6		7	31
고 한준호 준위		10	11	41
금양호 침몰	6	8	6	20
북한 동향	4	1		11
군의 사고 대응문제	1	2		9
생존자 근황	1	2	3	6
기타	5	4	7	15
계	276	236	196	708

- 보도내용에 있어서도 방송사별 특징이 나타났다. KBS는 군이나 정부의 브리핑 내용 전달하는 기사, 사고현장 스케치, 수색경과 보도 등의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MBC는 사고의 원인규명 기사와 사고발생 시각을 추정하는 기사의 비중이 타방송사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SBS는 유가족 동정 기사와 청와대, 정치권기사,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기사가 많았다. 특히 사고에 대처하는 군의 자세 대한 비판 기사가 7건으로 다른 방송사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4) 취재원

<방송 3사 보도의 취재원>

	KBS	MBC	SBS	계
군	160	120	98	378
해경	12	12	9	33
합동조사단	2	2	3	7
청와대	11	9	11	31
정부	5	3	5	13
정치권	12	6	20	38
유가족	36	39	28	103
전문가	40	40	26	106
백령도 주민	4	7	5	16
시민/네티즌	6	2	8	16
자체취재	0	12	10	22
미국	3	0	3	6
북한	2	1	1	4
기타	0	1	2	3
계	293	254	229	776

- 취재원에 있어서는 방송 3사의 단일한 보도행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방송 3사는 군, 해경, 합동조사단, 청와대, 정부 등 브리핑을 하거나 공보 담당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취재비중이 높았다. 이들의 비중은 전체 취재원 가운데 59.5%를 차지했다.
- 이 같은 보도행태는 군, 해경, 정부 등 사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취재원들이 방송보도를 최대한 잘 이용했다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정보를 가진 당사자들이 정보를 찔끔찔끔 흘리며 여론의 향배를 가늠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 군, 해경, 정부 등을 제외하고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활용은 106번으로 13.6%에 달했다. 하루평

군 7.6번이나 지상파 방송사는 전문가들을 이용한 것 사건의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군과 해경, 정부 등이 정보를 공개하는 인색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은 방송사들이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태를 분석했다기 보다, 불확신한 몇몇 개의 사실을 두고 군 경험자들의 추정을 그대로 보도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에 대한 무분별한 소문만을 양산한 결과를 나타냈다.

5) 사고의 원인

<방송 3사가 꼽은 사고의 원인>

	KBS	MBC	SBS	계
자체결함	4	4	4	12
유실기뢰	5	12	9	8
원인미상	4	14	11	29
암초	6	5	-	6
외부충격	4	4	4	11
계	46	48	35	129

* 한 기사에서 다양한 사고의 원인이 분석될 때, 복수의 원인 모두를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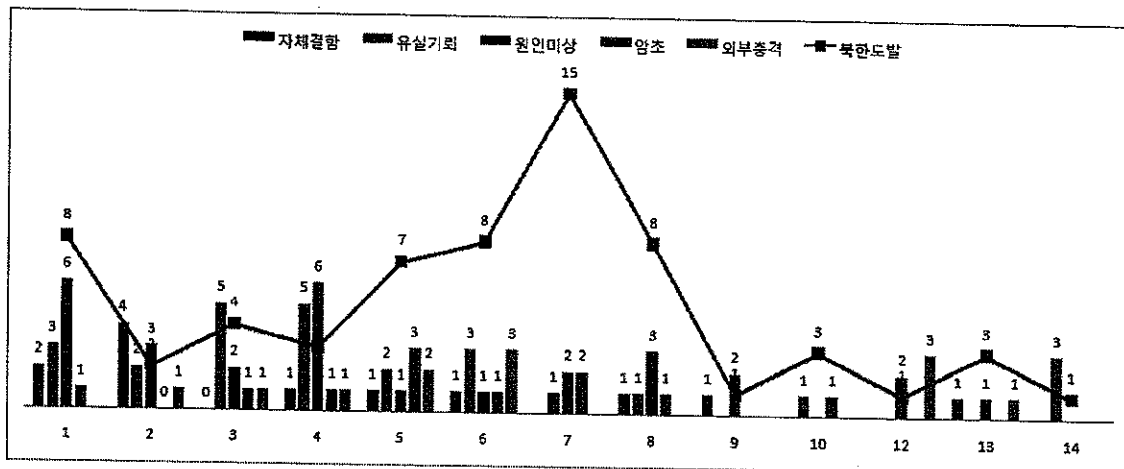
** 유실기뢰는 남측의 유실기뢰와 북측 유실기뢰 가능성 모두를 카운트했다.

*** 외부충격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충격'과 같이 외부충격에 대한 원인 불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을 남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방송사는 14일동안 129번 사고의 원인을 추정했는데, 일일평균 9.2번에 해당한다. 추측이 난무했음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 무엇보다도 문제는 방송3사가 추정하는 사고의 원인이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하루에도 각기 다른 추정은 수전에서 10여 건씩 쏟아내고 있다. 사고의 원인은 여러 건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 북한 도발이나, 자체 결함 같은 경우 양립도 불가능하다. 대립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여러 추정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다.
- 이 같은 보도는 충분한 검증이나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충분한 취재를 통해 추정원인의 현실성을 고려된다면 여러 사안을 다루더라도 병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수용자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보도 태도다. 앞서 서문에서 밝혔듯이 수용자들은 일관성이 결여된 언론사의 보도가 사실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사를 신뢰하기 힘들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천안함 보도는 모두 신뢰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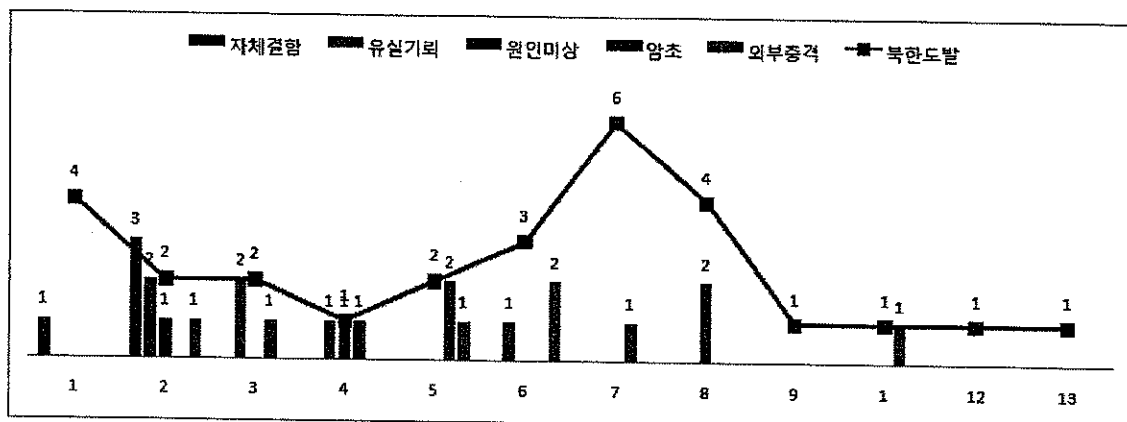
- 방송사들은 모두 사고의 원인을 북한의 도발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KBS는 29번, MBC는 22번, SBS는 14번의 보도에서 북한 도발설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고 원 추정 가운데 49.6%에 해당한다.
- 아래의 그림을 보면 북한 도발설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잠깐 언급됐다가, 6·7·8일이 경과한 후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방송 3사의 날짜별 사고원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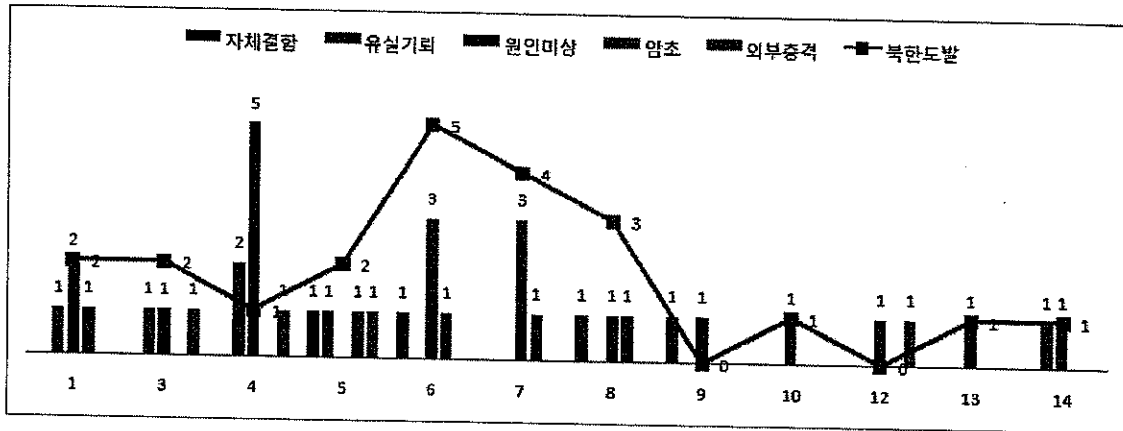


- 다른 사고의 원인은 그 언급 건수가 적고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지만 북한 도발설은 꾸준히 제기되는 한편 사고발생 7일 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 도발설이 꾸준히 거론되어오다, 북한 도발설이 사건 발생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장 많았던 이유는 천안함에서 탈출했던 군장병들이 단체로 환자복 차림으로 기자회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장병들은 “뭔가에 맞은 것 같다”고 기자들 앞에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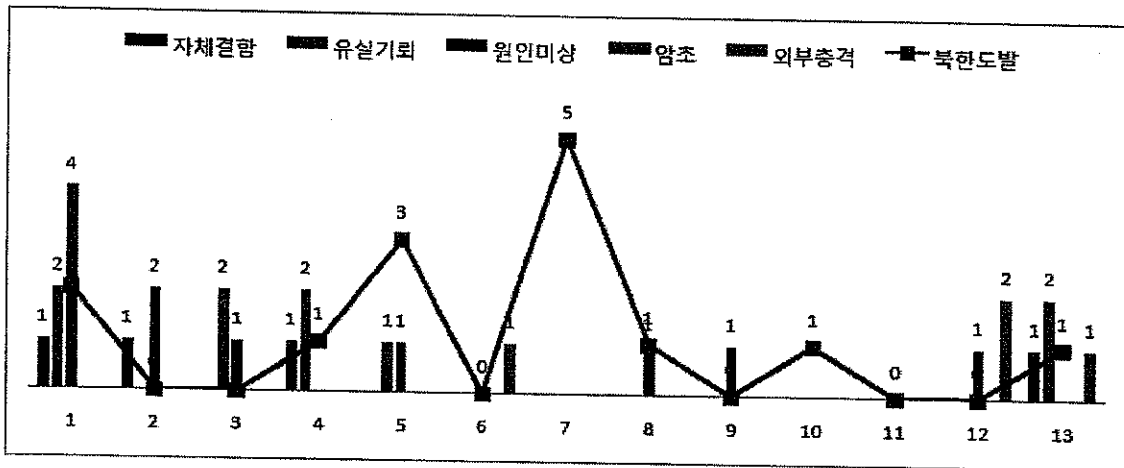
<KBS 날짜별 사고원인 변화>



<MBC 날짜별 사고원인 변화>



<SBS 날짜별 사고원인 변화>



- 방송 3사의 사고원인 보도를 비교해보면 북한 도발설을 이끈 방송사가 KBS임을 알 수 있다. KBS는 북한 도발설을 29번 언급해 방송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반면,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보도한 기사는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 또 KBS 보도의 문제점을 북한 도발설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데 있다. 사고발생 후 8일 이후로 다른 사고원인의 가능성은 거의 배제한 채 북한 도발설만을 보도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9일 이후 북한 도발설이 수그러들고 다른 사고 원인이 부각되는 SBS의 특히 대도되는 모습이다.

6) 보도 내용분석

이런 보도의 필요성이 있을까? _ 끼워 맞추기식 보도

SBS <8뉴스> 2010-04-05

"천안함 침몰 전후 북 300톤급 잠수함 움직였다"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 사이, 황해남도 비파곶 인근에서 사라졌던 북한 잠수함 두 척중 한 척은 행방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척은 여전히 당시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한 척은 300톤급 잠수함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송 위원장은 아직 연관성은 찾지 못했지만 만일 북한의 공격이라면 이 상어급 잠수함이 관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해 어뢰를 담은 '캡슐형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도 새로 제기됐습니다. 캡슐형 기뢰란 잠수함 등을 사용해 미리 해저에 묻어두는 무인작동 기뢰로 천안함이 만들어 내는 소음을 미리 입력해 두면, 천안함이 근처를 지나갈 때 센서가 이를 포착해 통에 든 어뢰가 발사돼 폭발합니다.

[문병욱/합참 작전기획차장 :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서도 캡슐도 토피도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련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중략)

하지만 캡슐형 기뢰는 발사 이후, 해저에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방부도 침몰해역은 지형 구조상 캡슐형 기뢰를 사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의 SBS의 보도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대표적 보도이다. 또 대표적인 방송의 '아니면 말고 식' 보도라 할 수 있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의 코멘트를 명확히 받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SBS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사실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확신도 없이 국회 국방위원장도 단언하지 못하는 추정을 그대로 인용보도하고 있다.

앞서도 말했듯이 방송은 보도는 영상과 음향이라는 특성 때문에 추정을 추정이라고 보도해도 사람들은 현실감있게 받아드릴 수 밖에 없다. 이 기사에서는 더욱이 합참의 기획처장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인터뷰'를 덧붙여 더욱 사실인 것처럼 꾸몄다.

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어디에서 확인했지는 밝히지 않은 첩보수준의 주장을 마치 국회 국방위원장 직함으로 사실인양 포장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방식은 조선일보가 추구했던 "따옴표 저널리즘"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비단 SBS의 문제만이 아니다. KBS, MBC도 마찬가지다.

KBS	MBC
"北 어뢰, 함정 소리 따라가 폭파" 2010-04-01 직주어뢰는 발사방향으로 움직이는 어뢰를 말하고 수동음향어뢰는 함정의 스크루 소리나 기관소음을 따라가는 어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반잠수정에 장착된 어뢰의 경우 소리를 따라가는 수동음향식 어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세환(군사 전문가) : "북한 잠수함이나 잠수정은 구소련에서 들여온 게 많습니다. 어뢰도 구소련의 기술을 도입해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뢰는 한번 맞으면 배 선체에 파공이 생긴 뒤 침몰되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배 아랫 부분에서 폭파해 '버블제트'와 같은 수압을 일으켜 전함을 두동강 내는 어뢰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년대 북한 기뢰?..기뢰 종류와 위력 2010-03-30 만약 기뢰나 어뢰에 의한 폭발이었다면 도대체 누가 언제 설치한 것인지, 여러 가능성을 전재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략) 어뢰처럼 소리에 반응해 목표를 따라가는 기뢰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음향기뢰는 특정배의 터빈음이나 스크루음을 입력해놔야 발동한다. 따라서 음향일 경우 어떠한 배후가 있는 건 아닌지..." 이 경우는 서해 경계망이 뚫려 기뢰가 설치된 것으로 그 파장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뢰는 폭발한 다음에 잔해를 찾기 쉽지 않아, 기뢰가 원인이라고 확인된다 해도 어떤 종류의 기뢰가 원인이었는지를 밝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의 KBS와 MBC의 보도도 SBS의 보도와 마찬가지로의 형식이다. KBS는 북한 어뢰, "직주어뢰"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한 것처럼 보도해 놓고 말미 "북한은 그러나 배아래 부분에서 폭파해 '버블제트'와 같은 수압을 일으켜 전함을 두동강 내는 어뢰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1,200톤급 천안함을 침몰시킬 만한 어뢰는 아니라는 것이다. 2분 동안 북한의 어뢰인 것 마냥 보도하다, 마지막 5초를 남겨두고 지금까지 2분동안 보도한 것은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모양새다.

MBC도 마찬가지다. MBC는 앵커가 기자가 사고 원인을 추정을 하기에 앞서 가정에 가정을 덧붙인다. "만약 기뢰나 어뢰에 의한 폭발이었다면 도대체 누가 언제 설치한 것인지, 여러 가능성 짚어봤다"고 앵커가 말했다. 기뢰나 어뢰에 의한 가능성이 현실과 일치(correspondence)할 개연성이 제기된 바가 없는데 뜬금없이 '만약에 기뢰나 어뢰에 의한 폭발이었다면'이라고 가정을 한 것이다. 더구나 앵커는 '만약'이라는 가정도 모자라 '가능성'을 덧붙였다. 이런 어법을 사용하면서 '뉴스' 보도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분석 유목예시

기사 내용

· 브리핑 전달

천안함 실종 남기훈 상사 시신 첫 발견(kbs 4.3)

함미에 대한 수중 수색 작업이 재개된 지 10분만에 남기훈 상사가 발견됐습니다. 오후 6시 7분이었습니다. 시신은 부사관 식당과 절단 부분에 있었습니다. 해군 해난구조대 잠수 요원 2명이 철쭉같이 어두운 45미터 깊이 바닷물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찾아낸 것입니다. 남 상사의 신원은 입고 있던 군복 명찰로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 사고원인 규명

-천안함 침몰 원인, 어뢰·기뢰 압축(mbc 4.9)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로 보면, 어뢰나 기뢰로 인한 외부 폭발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선체가 사선으로 찢겼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고, 사건 당시 물기둥을 봤다는 초병의 진술까지 나오면서 어뢰나 기뢰 폭발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침몰원인이 폭발물로 결론이 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 현장 스케치

- 눈물로 쓴 전우들의 편지..."미안하다, 보고싶다"(sbs 4.9)

생존 장병들은 천안함에 남아있을 전우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단 한명뿐인 입대 동기인 너를 그 어두운 바닷속에 두고 나 혼자 살아있어 미안하다."

"내 동기 현구야, 제발 대답해라,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

"살아 돌아온 저희가 죄송스럽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더 잘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것 그랬다."

가슴을 찢는 한 생존 장병은 실종자 가족에게 앞으로 아들과 형제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 수색 경과 보도

-백령도 앞바다 피 말리는 수중수색(kbs 3.30)

실종자 32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함미는 함수보다 훨씬 더 깊은 45미터 깊이 바닥에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작업 방식은 함수 부분과 유사하지만 40미터가 넘는 깊이여서 스쿠버 작업은 불가능하고 심해잠수장비를 이용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해난 구조대 잠수요원들이 ssds라고 불리는 심해잠수장비 없이 수색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 유가족 동정

-가족들 망연자실..."혹시나 했는데..."(mbc 4.3)

애타게 구조소식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시신발견 소식에 오열하고 있습니다. 남기훈 상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 팽택 2함대 사령부에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기에 나머지 실종 장병의 가족들도 침통한 가운데 말을 잃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청와대, 정치권 동정

- "국방장관·해군 참모총장 해임"...책임공방 가열(sbs 4.1)

민주당은 그동안 자제해왔던 문책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부실 대응과 오락가락 해명으로 국민들의 의혹만 키웠으며, 김태영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문책론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정부와 군의 진상 규명이 미흡할 경우 진상조사 특위 구성에는 협력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 인양작업

-인양 작업 '함수 빠르고 함미 느려'(kbs 4.7)

수심이 비교적 낮고 시야가 확보된 함수 부근에서는 오전에 선체 수중탐색을 끝내고 해저에 터널을 뚫기 위한 지형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굴착작업만 이뤄지면 2단계인, 쇠사슬로 선체를 묶는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천안함의 뒷부분이 가라앉아 있는 이곳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잦아 아직도, 선체의 형태를 파악하는 1단계 준비 작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함미 부근에서는 오늘 자정까지만, 마지막 정조시간을 이용해 야간 수중탐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사고 발생시간 논쟁

-최초 상황발생 "밤 9시 22분" 재확인(mbc 4.7)

천안함 침몰시간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단은 3월26일 밤 9시 22분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의 침몰 사건이 "3월 26일 밤 9시22분"에 발생한 근거로 몇 가지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해군의 실시간 전술지휘체계인 KNTDS 상 천안함의 위치 신호가 밤 9시21분57초에 중단됐고, 규모 1.5정도의 지진파도 밤 9시 21분 58초에 감지됐다는 것입니다.

· 한주호 준위 사고 보도

- 사투 벌이던 잠수요원 한주호 준위 순직(mbc 3.30)

오늘 백령도 앞 바다는 초속 10미터가 넘는 바람이 불고 조류가 빨라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 준위는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미군 살보함으로 이송돼 1시간 넘게 감압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오늘 오후 5시쯤 숨졌습니다.

· 금양호 침몰 사고 보도

- '금양호' 침몰 사고...2명 사망·7명 실종(kbs 4.3)

어제 천안함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돌아가던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선원 2명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나머지 7명은 실종상태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금양 98호는 대청도 서쪽 55킬로미터 해상에서 갑자기 자동 조난신호를 보냈습니다. 1시간 뒤 침몰을 확인한 해경은 선박 10여 척과 헬기, 항공기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밤 11시가 지나 침몰한 어선의 위치를 확인했을 뿐 밤새 실종자 9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본격화된 실종자 수색작업. 실종됐던 김종평 씨 등 2명을 찾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고, 선장 김재후 씨 등 7명의 행방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북한 동향 보도

-북한, 천안함 침몰 9일째 '침묵'...어떤 계산하나?(sbs 4.3)

북한 매체들은 오늘도 단 한마디의 반응도 없었습니다. 서해 NLL 인근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즉각 남측을 비난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9일 동안의 긴 침묵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언급했던 어뢰 가능성이 만에 하나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단서가 나오게 되면 북한은 국제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군사고 대응 문제

-함미 위치, '알고도 못찾았다' 비판 (mbc 3.29)

우리 군은 가라앉은 함미의 위치를 알고도 정작 이를 동안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폭발 당일 물속으로 사라진 함미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함미는 실제로 해군이 추정한 위치에서 50m 반경 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함정은 이를 동안 수색을 하고도 찾지 못했습니다.

· 천안함 탈출 생존자 관련 보도

-국군수도병원 6명 치료...생명 지장 없어(kbs 3.27)

부상자들의 상태는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침몰 때 다친 해군 장병 가운데 오늘 새벽 2시 쯤에는 2명이 헬기로, 낮에는 네명이 추가로 구급차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6명 모두의 상태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기타

-천안함 침몰 악재...금융시장 "지켜보자" 관망세(sbs 3.29)

지난 주말 천안함 침몰 사고 여파로, 개장 초 15포인트 넘게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적극 가담하면서 5.73포인트 내린 1,691.99에 마감됐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원인 조사 과정에서 북한 관련성이 드러나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에 돌입할 경우 금융시장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강만석(1999), <텔레비전 뉴스보도 대안모색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

송종길·이동훈(2004), 사회 위기와 TV저널리즘, KBI 연구 03-01

윤호진(2005) 2005 TV 저널리즘의 이슈와 쟁점 KBI 연구 05-01

천안함 관련 토론문

..... 유영주(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

<봄날>

아침, 그전에 이 말씀만. 율학교 이창동 교수는 녹천에는 뚝이 어찌고 썼지만 오늘 1호선 지나며 본 녹천 옆 언덕에는 눈물나게 이쁜 진달래들이 피고 있었습니다. 이 미친 봄에도 다시 온 진달래에게 난 감탄의 만세를 질렀습니다. 지하 철 속 창문 너머로 - @kohemi

<월요일 아침, 원두 커피 한잔을 보냅니다> 날씨는 조금 흐리지만 매봉산에는 푸른 잎들이 봄을 알리고 있네요. 파스텔 색조의 초록이 봄 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산의 숲속에서 가끔씩 산책이라도 하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여유를 갖고.... - @wedias2

봄을 느끼기에 너무 무거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곰곰히 생각해 보면 언제는 그러지 않았나란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서 봄을 함 느껴 바랍니다 - @singae

남쪽 진해에 꽃이 피어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꽃은 자꾸 눈물과 어우러져 떠오르고 그래서 이번 봄은 더 짙하다. - @wooram

<설>

오늘(4월12일)까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알 수 없다. 침몰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생존자들과 군 지휘체계와 안보관계장관회의가 특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침몰 원인은 대략 다음 경우의 수 중 하나로 추정된다.

북의 기뢰설

남의 기뢰설

북 잠수정의 어뢰설

내부 유증기 또는 탄약고 폭발설

암초 충돌설

독수리훈련 중이던 미함대의 오폭설

내부 불만을 가진 사병의 자폭설
 특작부대의 폭발물 부착설
 북 비행체의 대함미사일설
 피로파괴설
 신 버뮤다지역설
 대왕오징어 습격설
 꽃다방 미스리 위문단 승선설

이같은 상황에서 질문 하나,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이 왜 중요하지? (김수정,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인용하며 사실에 관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 사실에 관한 진실 접근이 봉쇄된 조건에서 진실 보도가 갖는 함의는?)

<진실>

폭탄이든 대왕오징어든 여태 안 밝혀온 걸 앞으로 정확히 밝힐 거라는 기대는 내려놓는다.(이태호 "정보공개청구 16개 항목 모두 비공개") 현재 발표된 사실은 3월26일 오후 9시22분 경 37도55분45"N, 124도36분02"E 장소에서 천안함이 원인 미상의 이유로 침몰하여 46명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설은 더 필요 없고 이것만으로도 사태 진단은 충분하다.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천안함 침몰의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이 시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3월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이지스함 Rassen, Curtis Wibur 2척과 한국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최영함, 윤영하함 등이 사고 인근지점에서 합동훈련(해상북침훈련) 중이었고, 사고가 벌어진 곳은 분단의 비극과 긴장이 가시지 않는 NLL 지역이었다. 이 점이 천안함의 비극을 낳은 본질적인 원인이다. (김수정,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의혹 증폭에 대해 언론이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각 주체영역간의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참사 사건에 대해 언론이 가져야 할 위치이자 사명이다." 그렇다면 각 주체영역간의 공론장을 매개하는 저널리즘 실천의 과제는?)

NLL과 NLL에서 반복되는 비극은 분단이 낳은 불행한 역사의 산물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서해5도 도서군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 군사통제 하에,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인민군총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했더랬다. 협정 체결 당시에는 해상군사분계선을 두지 않았는데 한 달 후 클라크 국제연합군총사령관이 서해에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한 것이 현재의 선(LINE)이 되었다.

이후 반세기가 넘는 동안 수차례의 해군 수송선과 꽃게잡이 어선 나포가 발생했다. 1985년에 남평호 제2등주호가, 1987년 1월에 제27호 동진호가 백령도 근처에서 나포됐다. 1999년 연평해전과 2002년 서해교전에서는 군인 6명이 숨지고 26명이 부상당했다. 이윽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합의해 역사의 아픔을 씻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고, 더 이상 NLL의 비극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고 분단모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남북의 분단고착 세력 탓에 긴장 유발을 부르는 군사훈련은 반복됐고, 2010년 NLL은

천안함 침몰이라는 최악의 사건을 빚고 말았다.

<반역>

라이히는 혁명에 대해 “인간 사회의 참을 수 없는 조건에 대한 합리적 반역으로 모든 사물의 근원에 도달하여 그 조건을 개선하는 합리적 의지”로 정의하는데, 이때 파시스트적 반역성은 “혁명적 정서가 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환상으로 왜곡되는 모든 곳에서 항상 나타난다”고 짚었다.

NLL에 대한 뿌리깊은 대결적 사고는 ‘인간 사회의 참을 수 없는 조건’을 용인하는 비합리적 타협이다. 연평해전, 서해 교전과 천안함 침몰은 ‘합리적 반역’의 여지가 원천봉쇄된 상태에서 빚어진 연쇄 사건이고, 진실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파시스트적 반역은 사물의 근원에 도달하여 그 조건을 개선하려는 모든 시도를 가로막는다.

분단모순에서 비롯된 사건 발생을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가공된 ‘안보’ 프로파간다라는 차명적이다.

“전두환 정부는 ‘KAL 007 피격(1983년9월), ‘아웅산 테러(1983년10월), ‘대한항공 폭파(1987년 11월)’ 같은 대사건이 났을 때 당시 정보부족 상태에서도 즉각적으로 소련과 북한정권의 도발이라고 단정, 국민들의 분노를 슬기롭게 관리하였다” (4월1일 조갑제)

“기뢰 폭발 가능성 집중 조사”(3월29일 조선1면)

“북한 개입 가능성 없다고 한 적 없다”(3월30일 조선1면)

“침몰 전후 북 잠수정이 움직였다”(3월31일 조선1면)

“북 반잠수정, 수심 2-30미터에서 어뢰 공격 가능”(4월1일 조선4면)

“최함장 ‘피격당했다’ 첫 보고”(4월2일 조선1면)

“김국방, ‘어뢰가능성이 더 실질적’”(4월3일 조선1면)

“천안함 침몰 어뢰공격 가능성 증폭”(4월5일 조선6면)

“상어급 북 잠수함 사라져 1척 그날 행적 아직 몰라”(4월6일 조선1면)

“어뢰였다면 스크루파편 남아있을 가능성”(4월7일 조선3면)

“북 연루됐다면 김정일 지시 있었을 것”(4월7일 조선5면)

“쿵 쿵 1-2초 간격 두 번 폭발음”(4월8일 조선1면).....

도대체 뭘 어찌지는 건데. “사랑이 충만한 봄날, 생명체에 달라붙어 고비 풀린 살인충동을 만끽하는 흡혈귀”¹³⁾들아.

13) 노동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살아있는 것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자연과학자, 그리고 자연스러운 사랑을 주는 자와 받는 자들이 자신들의 거대한 책임을 충분히 그리고 빨리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문명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생동하는 것은 파시즘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파시즘은 삶의 충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파시즘은 사랑이 충만한 봄날, 생명체에 달라붙어 고비 풀린 살인충동을 만끽하는 흡혈귀이다. 다음과 같은 두려운 질문이 남아 있다.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가, 또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에서의 자기조절이 평화적으로 진전될 것인가, 폭력적으로 진전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 빌헬름 라이히

천안함 사고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10. 3. 31

○ 정보공개청구 취지

1. 지난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난 채 침몰하고, 46명이나 되는 천안함 병사들이 실종되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6일째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 원인이 규명되기는커녕, 의혹과 불신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여기에는 국방부가 천안함 사고 당시 수행하고 있던 임무, 사고 전후 교신내역, 사고 접수 후의 군의 활동 내역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관계 정보조차 병사 가족과 시민들에게 공유하지 않고 통제일변도로 대응해 온 것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3. 더욱이 군과 정부는 사고 발생 시간과 사고 대응 일지조차도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고 부실한 단답식 대답과 잦은 반복으로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고,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설득력 있는 의혹과 추론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과 관련 정보의 제공대신 소극적 부인과 정보통제에만 급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이 생존 병사들과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하고 심지어 병사가족 동태를 감시하는 등의 구시대적인 비밀주의와 관료주의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4. 이로 인해 천안함의 침몰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의혹과 질문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고 당일 천안함의 독수리훈련 등 한미연합작전 참여 여부, 통상적이지 않은 항로 선택의 경위, 특히 백령도 인근 1마일 이내로 접근한 이유, 당일 있었던 함포사격의 목적과 경위, 한국군 및 미군 기뢰 설치 및 수거 여부, 구조 지연이 발생한 원인과 타당한 근거에 대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심지어 오폭 가능성도 거론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군과 정부에 의해 정당한 알권리를 박탈당한 병사 가족과 시민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자구적으로 노력한 결과로서, 이에 의문에 적절한 정보의 제공으로 답해야 할 책무는 전적으로 군과 정부에게 있습니다.
5. 이에 참여연대는 쏟아지는 각종 추측과 의혹을 제거하고 사고 발생 경위를 밝히기 위해 1) 사고관련 주요 일지와 교신기록들, 2) 해군의 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과 이행 기록 문서들, 3) 기뢰 등에 의한 외파의혹을 규명할 각종 문서들, 4) 당일 천안함 등이 참여한

기동의 목표와 임무, 한미연합전력의 배치 상황과 관련된 정보 등 4가지 분야의 16개 항목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아래와 같이 국방부에 접수하고자 합니다.

6. 이명박 정부와 군은 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군'과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무성의하게 일괄 비공개로 처리하는 무성의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은 의혹 해명에 필수적인 정보들이며, 이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핵심을 구성하는 정보들입니다. 정보공개청구된 문서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우려와 관심에 부응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진상규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지금까지 군과 정부에게 제기되어 온 심각한 불신과 의혹을 해명하는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정부가 지금까지의 관성대로 엘리트주의적인 비밀주의에 젖어 일괄 비공개로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를 가로막고자 한다면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군과 정부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밀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들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7. 더불어 우리는 정부의 진상규명과 정보공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병사가족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수단과 노력들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 아 래 -

■ 정보공개청구 내역

○ 각종 사고 관련 일지와 기록들

- 천안함 침몰 사고발생이 해군에 통지된 이래 3월 30일까지 국방부와 해군이 취한 모든 조치와 행동을 알 수 있는 일지 혹은 보고 문서 일체
- 3월 26일 침몰 당일 오후 6시 이후 천안함의 교신내용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 3월 26일 침몰 당일 오후 6시 이후 천안함 함장의 핸드폰 수신 및 발신 내용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 천안함 침몰 사고 생존자들에게 내려진 국방부 및 해군의 지시 또는 명령 사항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 사고 당일 오후 6시 이후 작성된 천안함과 속초호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등을 비롯한 두 초계함의 항해 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 일체
- 천안함 또는 다른 초계정이 사고지역 항해 또는 백령도 서쪽 1마일 이내에 접근한 사례와 내역을 알 수 있는 지난 2년간 항적일지 혹은 이와 관련된 보고 문서 일체

○ 각종 해군 지침과 매뉴얼

- 해군의 해상사고 발생시 대처하는 보고절차, 이항절차, 생존자 구조절차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혹은 지침 사본, 그리고 천안함 사고 발생 후 이 매뉴얼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보고 문서 일체

- 해군 함정, 특히 초계함 운항의 적정 수심과 관련된 매뉴얼, 지침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 해군 함정, 특히 초계함이 행하는 운항과 작전, 수리와 정비에 관해 기록 및 보고의무를 규정한 각급 매뉴얼, 지침, 내규 관련 문서 일체

○ 기뢰 등에 의한 폭파의혹 혹은 오폭 의혹 관련

- 한국전쟁 당시 북측이 서해상과 동해상에 각각 설치한 기뢰의 종류와 수량, 지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록 혹은 보고서 일체
-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NLL 이남 서해상에서 발견 혹은 제거된 북측 혹은 남측과 미군 측 기뢰, 폭뢰, 어뢰의 종류와 수량에 관해 알 수 있는 기록과 보고 문서 일체
-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NLL 이남 서해상에 설치한 바 있는 기뢰, 폭뢰의 종류와 수량, 제거 시기와 잔존 혹은 실종 장비의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각종 기록과 보고 문서 일체
- NLL 이남 서해상에서 기뢰를 이유로 항해 위험 혹은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던 사례의 유무와 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 일체

○ 천안함의 당일 임무와 독수리 작전 관련

- 천안함이 당일 수행하고 있던 임무와 백령도 인근 통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기록 혹은 보고문서 일체
- 한미 독수리 훈련의 훈련 내용과 천안함이 독수리 훈련과정에서 수행하게 될 기동의 내용과 연습할 장비의 종류와 연습방식을 알 수 있는 기록 혹은 보고문서 일체
- 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점에서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 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혹은 보고문서 일체



해 군 제 2 함 대 사 령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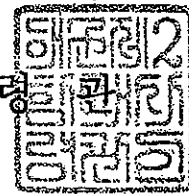
수신자 임종대(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귀하
(경유)

제 목 정보공개청구서 처리결과 송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해본 행정관리과-2516호(2010. 4. 5)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 처리 결과를 불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3. 정보결정 이의신청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군 2함대 인사참모실(인사참모 중령 양재석, 031-685-410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 임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끝.

해 군 제 2 함 대 사 령



계획과장

대위

인사참모

중령

참모장

대령

부사령관

준장(진)

2함대사령관

소장

협조자

시행 인사계획과-@N 2008 (2010.04. 7) 접수

우 451-820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7리 사서함 800-1 /

전화 912-4140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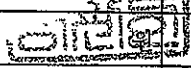
/ doinmu@navy.mil /

공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 신 자 참여연대(임종대)

접 수 일 자	2010.03.31	접 수 번 호	1023786
청 구 정 보 내 용	1. 각종 사고관련 일지와 기록들 2. 천안함 침몰사고 발생이 해군에 통지된 이래 3월 30일까지 국방부와 해군이 취한 모든 조치와 행동을 알 수 있는 일지 혹은 보고문서 일체 3. 3월 26일 침몰 당일 오후 6시 이후 천안함의 교신내용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4. 3월 26일 침몰 당일 오후 6시 이후 천안함 함장의 핸드폰 수신 및 발신내용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5. 천안함 침몰사고 생존자들에게 내려진 국방부 및 해군의 지시 또는 명령사항 일체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6. 사고당일 오후 6시 이후 작성된 천안함과 초계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등을 비롯한 두 초계함의 항해 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 일체 7. 천안함 또는 다른 초계함이 사고지역 항해 또는 백령도 서쪽 1마일 이내에 접근한 사례와 내역을 알 수 있는 지난 2년간 항적일지 혹은 이와 관련된 보고문서 일체 8. 각종 해군지침과 매뉴얼 9. 해군의 해상사고 발생시 대처하는 보고절차, 이함절차, 생존자 구조절차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혹은 지침 사본, 그리고 천안함 사고발생 후 이 매뉴얼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보고문서 일체 10. 해군함정, 특히 초계함 운항의 적정 수심과 관련된 매뉴얼, 지침 또는 이를 포함하는 문서 일체 11. 해군함정, 특히 초계함이 행하는 운항과 작전, 수리와 정비에 관해 기록 및 보고의무를 규정한 각급 매뉴얼, 지침, 내규관련 문서 일체 12. 기뢰등에 의한 폭파 의혹 혹은 오폭 의혹 관련 13. 한국전쟁 당시 북측이 서해상과 동해상에 각각 설치한 기뢰의 종류와 수량, 지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록 혹은 보고서 일체 14.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NLL 이남 서해상에서 발견 혹은 제거된 북측 혹은 남측과 미군 측 기뢰, 폭뢰, 어뢰의 종류와 수량에 관해 알 수 있는 기록과 보고문서 일체 15. 특히 한국군과 미군이 NLL 이남 서해상에 설치한 바 있는 기뢰, 폭뢰의 종류와 수량, 제거 시기와 잔존 혹은 실종 장비의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각종 기록과 보고문서 일체 16. NLL 이남 서해상에서 기뢰를 이유로 항해위험 혹은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던 사례의 유무와 내역을 알 수 있는 문서 일체 17. 천안함의 당일 임무와 독수리 작전 관련 18. 천안함이 당일 수행하고 있던 임무와 백령도 인근 통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기록 혹은 보고문서 일체 19. 한미 독수리 훈련의 훈련내용과 천안함이 독수리 훈련과정에서 수행하게 될 기동の内容과 연습할 장비의 종류와 연습방식을 알 수 있는 기록 혹은 보고문서 일체 20. 사고당일 사고 발생지점에서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 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혹은 보고문서 일체		

공 개 내 용		없음	
비 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와 귀 단체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가 요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청구인이 요청하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7, 18, 19, 20항은 군사작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 시 군 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현재 국방부 주관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이 관련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2, 5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청구인이 요청하신 13, 14, 15, 16항은 우리부대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 결정에 불복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 20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개 방 법		공 개 형 태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 부 방 법	☐ 직접 방문 ☐ 우편 ☐ 모사전송 ☐ 전자우편 ☐ 기타()
공 개 일 시 (기 간)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원	원		원
수 수 료 산 정 내 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10년 4월 6일 해 군 제 2 함 대 사령관 			
우450-820 /주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사서함 800-1호 /홈페이지 주소 전화(031-685-4100) /전송() /담당자 중령 양재석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